

Left21.com

2010년 12월 11일 ~ 12월 24일 | 제46호 | 값 1,800원

리포트21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미국과 남한 정부

대북 압박 강화 중단하라

연평도 사태를 빌미로 한 미국 제국주의의 영향력 강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 **관련기사 3,4,5면**

12월 5일, 오바마는 후진타오에게 전화해 “북한의 도발이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협조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오바마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책임이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워싱턴에 모여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필요시 각국의 국내 조치를 통한 제재 강화”도 포함돼 있다. 한·미·일은 중국의 6자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한·미·일은 모든 것을 북한 탓으로 돌리며 북한에 ‘2005년 9·19 공동성명 의무 이행을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것은 지겹도록 반복된 적 반하장식 태도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회담을 마칠 때 이미 미국은 경수로를 제공할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해체하겠다고 발표했고, 회담 직후에는 BDA(방코델타아시아) 자금을 빌미로 대북 금융제재를 가했다.

질질 끌다

그 후 미국이 중동 전선에서 고전하는 상황에서 9·19 공동성명의 후속조치를 위한 2·13, 10·3 합의가 2007년에 이뤄졌지만, 미국은 약속 이행을 질질 끌다가 2008년 12월에 느닷없이 새로운 조건(시료 채취를 통한 핵 검증)을 내걸어 6자회담을 결렬시켰다. 당시 북한에 약속한 중유 공급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

사실 경수로에는 이미 1994년 미국 클린턴 정부 시절 제네바 합의 때부터 북한이 약속받은 것이다. 북한은 합의의 대가로 1994년부터 2002년까지 핵시설을 동결하고 사찰도 받았지만, 경수로 제공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오바마 정부 들어서도 변한 것은 없다. 여전히 북한을 핵 선제 공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대북 제재는 여전히며, 자신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은 약속을 북한더러 지키라는 뻔뻔함도 똑같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2차 핵실험이 벌어진 것이다.

최근 북한을 방문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살펴본 지그프리트 해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의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이 시설을 지난해 4월부터 짓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시점은 미국이 2차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북한에 추가 경제 제재를 도입할 때다. 오바마 정부가 부시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 문제를 키운 것이다.

올해 3월에도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몰고 가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벌였다. 이런 일련의 긴장 고조 과정 속에 연평도 사건이 터진 것이다. 현재와 같은 대결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전 통일부장관 임동원의 말도 전혀 터무니없는 예측은 아니다.

그런데도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미국은 제국주의적 압박을 강화하며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를 서해까지 전진시켜 한미 합동훈련을 벌이고, 그 직후에는 사상 최대의 한일 군사훈련을 했다. 이에 자극받아 중국도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했다.

남한 정부와 우익들은 호전적 선동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은 신임 국방부장관 김관진에게 “지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라는 “혈서를 쓰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교전수칙 단계를 줄여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명박 정부는 교전수칙을 더 공격적으로 개정하겠다고 한다.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자위권을 행사해 전투기 폭격으로 대응하는 데 한미가 합의했다고 한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개성공단 철수도 거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해5도를 요새화하려 하고, 국방예산도 증액했다. 12월 셋째 주에는 연평도 포격을 촉발한 서해 5도 해상 사격 훈련도 재개할 예정이다.

레이더에 빠진 이명박 정부는 ‘북한 위협’을 내부 단속에 이용하고 있다. 현 상황을 “국가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고는 한미FTA 재협상을 신속하게 타결했고, 2011년 예산안도 강행 처리했다.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도 거론되고 있다.

물론 북한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핵개발을 포함한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체제를 단속하는 것은 옹호할 수 없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듯이 군사력 증강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 전혀 반제국주의적 행동이 아니다. 무기



방위청 제공

한미합동훈련에 참가한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 미국은 중국과 북한 바로 앞마당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증강에 우선 투자하는 ‘선군정치’를 강화하는 동안 북한 민중은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더 큰 책임은 미국의 대북 압박과 그것에 동조한 남한 정부에 있다. 원인 제공자인 이들이 또다시 대북 압박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

반도 불안정성을 더 높일 것이다. 따라서 연평도 사태를 빌미로 한 제국주의적 압박 강화를 중단해야 한다.

최미진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파업

잠정 평가와 전망 3, 8~9면

세상은 요지경

안상수: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
황진하: “이게 76마리 같고 ... 아, 이게 곡사포구나”
보은병 갖고 쇼하는 한나라당

“영장 나왔을 때 군대 가야지, 늑어가지고 이제 군대 가겠다니”
‘전쟁나면 입대하겠다’는 안상수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정부의 안보관계에 참가하는 장관이나 참모만이라도 이번 기회에는 병역 면제자는 좀 정리해 줘으면 한다”
한나라당 홍준표, 이명박부터?

“고시 합격 4년간 직원들의 연봉을 알아봤는데, 이현대차 비정규직]보다 적었다”
노동부장관 박재완, 그럼 니가 해라 비정규직

“대통령과 합참의장은 역사적인 폭격을 놓쳐 버렸다. 흔히들 주먹이 운다고 한다. 지금 대구 공군기지에서선 F-15K 45대가 울고 있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

“돈을 더 받기 위해 자기가 맞은 부분이 있어요. 파이트 머니라고 할까요? 쉽게 말해서, 사실은 2천만 원 어치도 안맞았어요, 제가 볼 때는”
노동자 구타한 재벌 2세 최철원 회사의 한 간부

“연예인 마약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터지면 얘기가 묻혀서 잘 풀릴 거야. 걱정하지 말고 어께 피고 다녀”
영화 <부당거래>의 마지막 대사

“1단계는 가족잡바를 입는다. 2단계는 지하버커에 들어간다. 3단계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명박의 위기 대책

“한나라당은 일단 유사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의 청년들에게 다양한 병역면제 수법을 전파한다”
네티즌이 만든 ‘한나라당의 전신행동 수칙’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백 미터 파리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풀무집(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자난 호 <레프트21> 온라인 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다섯 기사는 '대북 강경책을 빌미로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탄압 말라,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현장 취재 (12월 1일)] 이경훈 집행부는 배신적 작태를 중단하라', '최 없는 민간인을 살상하는 북한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왜 북방한계선(NLL)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이경훈 지부장과 박유기 위원장은 점거파업을 왜해서하려 하는가' 등이었습니다.

www.left21.com

이명박 정부가

연평도 포연 속에서 반동 정책을 밀어붙이다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호전적 광기를 드러내며 대북 강경 대응책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사람들의 눈이 이 문제로 쏠린 틈을 이용해 그동안 밀려온 개악과 악행들을 서둘러 처리하고 있다.

‘촛불의 악몽’이 떠올라 이명박이 함부로 하지 못하던 한미FTA가 일변 타자였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진 바로 다음날 이명박 정부는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포연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뤄진 재협상 결과는 엉망이었지만 이명박 정부와 주류 언론은 ‘국익’ ‘안보’ 협박으로 이를 가리고 있다.

한미FTA를 타결하자마자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밀려 있던 각종 악법들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엄청난 액수의 4대강 예산과 부자 감세가 예산안의 핵심이다.

사실 연평도 사건 전에는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감세 계획 검토 얘기까지 나왔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연평도 포격 사건이 열어 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격투까지 해 가며 날치기로 예산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부자 감세 철회와 복지 확대 요구도 잿더미 속에 묻어 버렸다. UAE 특전사 파병안도 날치기 통과됐다.

뿐만 아니라 교육시장화를 위한 서울대 법인과 법안, 장애인 인권을 공격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묵은 악법’들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법안 하나당 20~30초씩 순식간에 27개 법안이 날치기 처리됐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들것에 실려 나갔고, 민주당 의원 강기정은 입술이 터져 피를 흘렸다.

신호탄

다른 국가기구들도 일제히 이 틈에 민감한 문제들을 해치워 버리겠다고 나섰다.

법원은 4대강 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관련 2심 재판에서도 ‘허위보도’를 했다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역풍을 예상해서인지 무죄로 판결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들어 3년째 반복된 날치기의 현장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편에서 싸운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 이종희·박래균 공동집행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 4개월과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참에 정권의 비리들도 덮으려 한다. ‘대포로 대포폰을 덮으려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명박의 ‘절친’ 천신일은 포성을 듣고 재빨리 귀국했고, 성희룡 파

문을 일으킨 강용석도 넉 달 만에 국회로 돌아왔다.

어처구니없게도 청와대는 이 와중에 이명박의 퇴임 후 경호시설을 짓는 데 1백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이처럼 이명박이 과속 질주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무기력하기만 했다. 민주당은 ‘대북규탄결의안’에 찬성해 ‘안보정국’ 조성에 일조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문제에서도 끊임 없이 필요했다. 손학규는 ‘4대강 예산을 줄여 그 돈을 국방에 투자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

이명박 정부는 연평도 사태를 이용해 자신의 치부를 덮고 반동적 정책을 밀어붙이지만, 이 정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불만과 분노도 커지고 있다.

장호중

청와대 사찰

자기 계급은 못 믿고 저항은 두려워하는 이명박

민주당 의원 이석현이 또다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다.

포항 출신 청와대 행정관 이창화의 사찰 수첩에는 한나라당 내 친이명박계 의원들을 제외한 정치인들에 대한 광범한 사찰 내용이 담겨 있다.

이창화는 정치인이나 관료 들만이 아니라 진보 단체들도 사찰했다.

수첩에는 민주노동 내 인사들을 정치성향에 따라 분류한 메모도 있고 화물연대·서울대병원 노조·공공연맹·철도

노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흔적도 있다. 다함께, 노동자의힘 같은 좌파 단체들과 진보연대·참여연대를 사찰했음을 시사하는 메모도 있다.

불법 사찰 활동을 벌인 이창화는 국정원으로 복귀해 오히려 승진까지 했다.

청와대의 노동·시민·사회 단체 사찰 내용은 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 수첩 내용도 빠짐없이 공개돼야 한다. 이런 짓을 사주한 책임자들은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런 내용까지 유출될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통제력이 취약해지고 레임덕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 검찰·경찰·국정원 같은 핵심 권력 기관들의 정보를 믿지 못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내밀하게 사찰해야 할 정도로 이들 사이의 갈등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보여 준다.

장호중

최철원의 ‘맷값’ 노동자 폭행

계급 지배의 단면

SK그룹 재벌 2세인 최철원의 노동자 ‘맷값’ 폭행 만행이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철원은 화물연대 탈퇴를 거부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하던 유홍준 씨를 야구 방망이로 ‘한 대에 백만원’이라며 열 대를 때리고, 너무 아파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이제는 ‘한 대에 3백만원’이라며 세 대를 더 때렸다. 그리고 유홍준 씨를 일으켜 세워 입 안에 휴지를 구겨 넣고 얼굴을 가격했다.

<시사매거진 2580>은 12월 5일 ‘민기’지 않는 구타사건’을 통해 “경찰이 <2580> 보도가 나가기 이전에 폭행 사실을 최철원 전 사장으로로부터 듣고도 묵인했다는 정황이 새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일이 현실에서 버젓이 자행된 것은 단지 어느 재벌 2세의 비뚤어진 폭력성 때문이 아니다. 민주노동도 “이러한 사태는 일부 재벌기업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가진 자들의 보편적 정서”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핵심 지배 세력인 재벌 일가들



“최 사장이 었드리라고 했습니다. 한 대에 1백만 원씩이다.”

은 노동자들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탐욕스러운 이윤 추구 때문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다.

용역강패를 고용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집단 테러를 자행하는 정몽구

사진 제공: MBC <시사매거진2580> 화물연대

를 보라.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줄줄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삼성 이견회를 보라. 노동자 수십 명이 돌연사한 죽음의 공장 한 국타이어에서 진실을 덮기 급급한 이명박 사돈을 보라.

멸시

더군다나 이번엔 최철원의 표적이 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도 박탈당한 채 노예 같은 삶을 강요당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졌고, 자본가들의 공격은 더욱 악랄해졌다.

지난해 화물연대 박종철 열사의 죽음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수면위로 드러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고용승계 거부나 일방적인 해고, 노조 탈퇴 강요 같은 일상적이고 체계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화물연대 지부장인 유홍준 씨는 이런 탄압에 맞서 저항하다가 최철원에게 야구

방망이로 폭행당한 것이다.

따라서 화물운송 노동자들 “발톱 밑의 때만도 못한 하찮은 존재로 보고 천인공노할 폭행”을 자행하는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1조 5천억 원을 분식회계하고 비자금 1천억 원을 정치권에 뿌린 SK그룹 회장 최태원이 보석으로 풀려나고, 조폭들을 대동해 술집 종업원을 무자비하게 구타한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듯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최철원도 숨방망이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강철구

알립니다

<레프트21>의 주소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우)100-877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2가 57-1
(주) **레프트미디어**

논설

연평도 포격 사건

미국과 이명박은 위험을 키우고 있다

지난 11월 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해 무고한 민간인을 포함해 4명이 사망했다. 이에 대한 남한 측의 보복 포격으로 북한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방송은 “적의 포탄이 민가 주변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남북한은 그동안 해상 총격전은 수차례 벌였지만, 민가가 있는 육지를 향해 서로 포격을 가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다. 한국전쟁 기록 영화를 연상케 하는 연평도 주민의 피난 행렬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번 사건은 지난 몇 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이 쌓여 온 결과다.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먼저 변할 때까지 “전략적 인내”를 하겠다며 북한과의 협상을 외면하고 있다. 그의 대북 정책이 ‘부시 3기’라고 불리는 이유다.

굴복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입기 말까지 남북관계를 열어 붙은 상태로 놔둘 각오”가 돼 있다. 그들은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미 입증됐듯이, 이런 압박

정책은 결코 북한을 굴복시키지 못한다. 얼마 전 북한 당국은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이자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를 불러 현대식 우라늄 농축 시설을 전격 공개했다. 북한 측은 원심분리기 2천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짓기 시작한 것은 오바마 정부가 2009년 초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이유로 경제 제재를 가했을 때다. 부시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북한의 핵폭탄을 흔히 “부시의 핵폭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설은 ‘오바마의 우라늄 농축 시설’인 셈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을 지렛대로 미국을 협상장으로 불러내려 한다. 3차 핵실험이 곧 있을 것이라는 무시 못할 예측도 있다. 연평도 포격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이를 통해 미국에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압박한 것일 수 있다. 서해 5도 — 연평도는 그중 하나다 — 와 주변 해역은 정전협정의 문제를 보여 주는 복잡한 분쟁 지역이다.

또,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 세습 과정 중인 북한은 내부 결속을 다질

필요도 있다. 그로기 상태로 그러저럭 버텨 온 경제 상황 속에서 3대 세습은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외부 적과의 충돌은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미국과 이명박 정부는 압박의 산물인 연평도 포격 사건에 더한층의 군사적 압박으로 대처하며 위기를 키우고 있다. 우익은 연일 강력한 보복을 요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서해일대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을 내놓고 있다.

한미 양국은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서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는데, 미국은 여기에 항공모함 조지워싱턴 호를 파견했다. 미국은 ‘천안함 사건’ 이후 올해 7월 한미연합훈련 때도 조지워싱턴 호를 동원하고 싶었지만 중국의 항의로 동해로 옮겨서 훈련을 해야 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기회로 이 항공모함을 서해, 즉 중국의 코앞까지 밀어넣은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평

계로 동아시아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들 — MD구축, 한미·미일 동맹 재편 — 은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경제 위기 속에서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데, 환율 문제뿐 아니라 2009년 남중국해와 서해에서 두 차례 해상 대치 같은 일로도 나타났다.

미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중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과 직접 대화하려는 북한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것이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항공모함을 동원하는 것은 화약고 근처에서 불장난하는 것과 같다.

패권을 위한 강대국들의 횡포를 우려하는 진보 염원 대중은 북한의 ‘반제국주의 투쟁’이라는 신화를 믿기보다는(북한의 궁극 목표는 미국과의 화해·협상을 통한 관계 정상화다), 또 그 이른바 ‘반제국주의 투쟁’이 효과보다는 역효과를 낸다는 점을 간파하고 그 대안으로 진정한 반제국주의 투쟁인 아래로부터의 반제국주의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항공모함을 동원하는 것은
화약고 근처에서 불장난하는
것과 같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잠정 평가

노동자 투쟁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 주다

전국적 투쟁 초점을 형성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5일간 점거파업이 일단락됐다. 비록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비’자를 뺄 때까지 싸우겠다”던 다짐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 투쟁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노동자들은 김밥 한 줄로 배를 채우고 얇은 비닐 한 장만 덮은 채 자면서 한 달 가까이 점거파업을 계속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투쟁에 빨려 들어갔다. “가슴이 벅찬 느낌에, 뉴스를 찾아 보면서 눈물을 절끔거리고 있습니다. 감동으로 사람을 몹시 떨리게 하는 무엇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무엇’은 바로 비정규직도 뭉쳐서 투쟁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해방감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그야말로 2등 시민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 왔다. 임금만 반토막이 아니다.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가고, 담배도 맘대로 못 피는” 게 비정규직이다.

“중매를 봐도, 보험을 들어도, 반상회를 나가도, 동창회를 나가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냐고 물어” 봤다. 비정규직이라고 말하는 순간 싸늘한 반응이 돌아 왔다.

희생자

많은 사람들이 비정규직을 희생자로 여겼다. 불안정 고용 때문에 비정규직은 노조로 뭉치기도 어렵다고 했다. 고공농성이나 단식투쟁밖에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 싸움은 이기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은 이런 생각을 정면 반박했다. 이들은 순식간에 노조원 수를 세 곱절이나 증가시킨 후 강력한 점거파업으로 한국 최대 기업에 타

많은 사람들은 비정규직을 2등 시민으로 여겼지만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강력한 점거 파업으로 한국 최대 기업을 마비시켰다.



김민우 기자

격을 줬다. 현대차 공장에서 점거파업이 벌어진 것은 12년 만이었다.

불만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폭발 직전에 있는 전국의 수많은 비정규직들이 이 투쟁을 보면서 흥분과 기대를 가진 것은 이 때문이다. 물레 눈물을 흘리며 일하던 노동자들의 가슴속에 ‘우리도 뭉쳐서 싸울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준 것이다.

이 투쟁은 2006년 포항건설 노동자들의 포스코 점거 투쟁, 2007년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매장 점거파업에 이어서 비정규직 투쟁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 투쟁은 2008년 촛불항쟁에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맞섰던 미조직 청년들의 저항 정신이 사라지지 않았음도 보여 줬다. 반이명박·반신자유주의의 불길이 조직 노동자들에게 번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 줬다.

벌써 레임덕 조짐을 보이는 이명박에게 이것은 매우 두려운 사태 발전이다. 연평도 사태에서도 국방부장관 김태영과 국정원장 원세훈이 이명박에게 은근히 책임을 떠넘길 정도로 이 정부의 레임

덕 양상은 눈에 띈다. 이 상황에서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며 투쟁에 나선다면 이 정부의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최근에 조직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서서히 높아져 왔다. 최근 기룡전자와 동희오토의 승리, 5만 명이 결집한 노동자대회도 그것을 보여 줬다. 이명박의 레임덕 자체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고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 투쟁은 또한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한 반격이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가장 큰 희생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것에 맞선 것이다. 그리스·프랑스 노동자 투쟁이 보여 준 저항 정신이 한국의 현대차에서도 나타났다.

인도 현대차 노조는 지지 성명서에서 “동지들의 투쟁은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일 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노동자, 세계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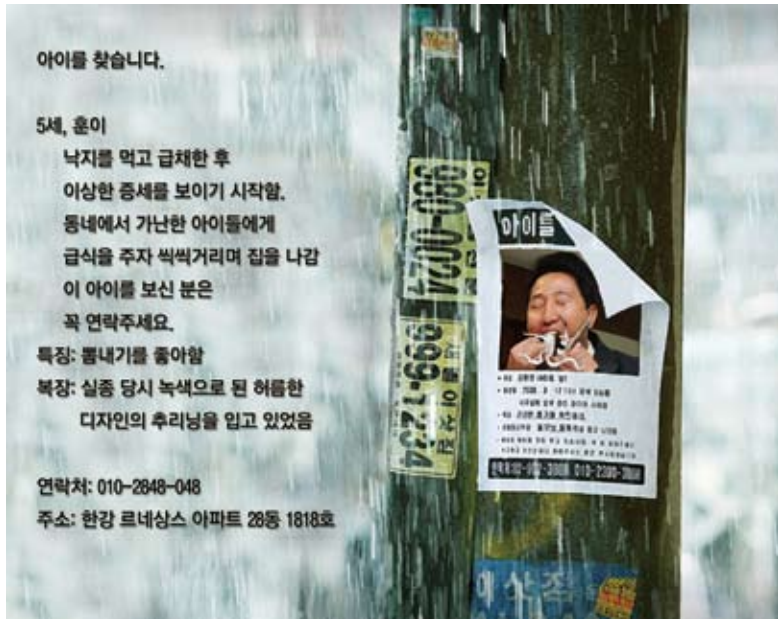
전지윤

» 이어서 8~9면을 보시오.

폴라주 ④1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다섯 살 남자 아이를 찾습니다



임두전

왜 미국은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가



중국 정부를 긴장시킨 한미합동훈련에 참가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 미국의 대북 압박은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다.

원래 미국의 대북 압박은 제2차세계 대전과 한국 전쟁 후 미국 제국주의와 소련 제국주의 간 냉전 경쟁 체제의 일부였다. 미국의 북한 봉쇄는 중국과 소련을 포함한 '동방 진영' 봉쇄의 일부였다.

그러나 미국은 1979년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1989~91년 소련과 동구권 스탈린주의 정권이 붕괴한 뒤에도 북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왜 초강대국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를 계속 압박하는가?

그것은 냉전을 전후로 경쟁자들에 직면한 미국 제국주의가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기 위치를 유지 확장하려는 노력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다.

전후 미국 자본주의는 압도적 우위를 누렸다. 최대 경쟁자인 소련 제국주의조차 미국의 경쟁력을 따라올 수는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미국은 서방 진영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군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독일과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미국 제조업의 심각한 경쟁자로 등장했다. 베트남 전쟁의 수렁은 미국 군사력의 한계를 보여 줬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초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지고 전 세계적 불황이 닥쳤다. 1980년에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퍼센트(1945년에는 40퍼센트)로 추락했다.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기억이 아직 생생하던 1982년, 미국 경제가 또 한 번 심각한 불황에 직면했을 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세기'가 종말을 맞이 하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경쟁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강화하는 등 미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적 조건을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처지에서 좀더 쉬운 대안은 미국 군사력의 우위와 미국에 군사적으로 종속돼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미국의 우위를 지키는 것이었다. 일본의 맹렬한 추격 앞에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대 초 레이건이 제2차 냉전을 부르짖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9~91년 소련과 동구권 스탈린주의 정권이 붕괴하고 미국이 동맹들에 규율을 부과할 능력이 약해질 듯하자 미국 제국주의는 방향 전환을 해야 했다.

공통의 적

미국 지배자들은 동맹들을 묶어 둘 공통의 적을 만들고, 그들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동맹 체제 밖에 있는 (준)열강들과 (미국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간질하는 정책을 폈다.

1991년 걸프전, 1999년 유고슬라비아 공격과 이른바 '인도주의 개입론' 등은 전자의 대표적 사례였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미국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부각된 북한 핵개발 문제를 1990년대 초에는 이른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 위협 중 하나로 격상시켰다.

미국 정부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와 밀로세비치의 세르비아를 히틀러에 버금가는 위협으로 황당하게 과장한 것처럼 1991년 걸프전 승리 직후 미국 정부는 북한이 후세인 다음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핵 위협은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인 한국·일본과 떠오르는 열강이자 북한 후견인인 중국 사이의 관계를 결고르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

2000년대 초반이 됐을 때 미국 패권을 제약하는 세계 체제의 원심력은 여전히 있었다. 1990년대 일본과 독일 경제가 정체한 덕분에 미국은 선진 국가들 중에서 여전히 경제적으로 가장 몸집이 컸다. 그러나 과거의 압도적 지위를 회복하지는 못했다(세계 경제의 약 25퍼센트).

또, 동맹국들을 성공적으로 미국 군사 동맹의 틀 안에 묶어 놓았지만 동맹국과 미국 간 경쟁적 성격은 여전히 있었다(2000년대 초 미국과 유럽연합은 철강과 항공에서 대형 무역 전쟁을 치렀다).

새로운 자본축적 중심지(특히 중국)의 등장은 미국 자본주의의 중심 질서를 뒤흔들 잠재력을 가진 듯이 보였고, 미국 동맹들과 중국 간 경제 관계가 갈수록 긴밀해지는 것은 우려스러웠다.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보면, 일본·한국·타이완의 제조업체들은 모두 중국을 주요한 해외 생산 기지 중 하나로 삼았다.

중국은 한국과 타이완의 최대 교역국이자 일본의 최대 투자처 중 하나가 됐다. 덕분에 1990년대부터 북핵 문제 등을 놓고 한국, 일본과 중국이 얽히락뒤 치락하는 동안에도 이들 나라 간 경제적 통합은 가속화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햇볕’정책의 모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퍼 주다가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과 남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무시정책이 연평도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우리는 이들이 ‘햇볕’을 문제 삼으며 호전적 대응을 정당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익들의 공세는 결국 제국주의적 정책에 반대하는 남한 좌파들을 겨냥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햇볕’정책은 평화의 수단이 될 수 없다. 김대중 정부가 만들고 노무현 정부가 계승한 햇볕정책은 북한의 급격한 붕괴가 아니라 연착륙이 남한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북한 정권과 교류·협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

빼기

2001년 9·11 테러를 빌미로 부시 정부가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전쟁, 이란 ‘핵 위기’는 중동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통해 미국 패권을 제약하는 경향에 빼기를 박으려는 시도였다. 한 네오콘 사상가의 표현을 빌리면 “세계에 [미국 중심의] 질서를 부여하려는” 시도였다.

이것이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

을 것이다. 이 실패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미국 제국주의가 또 하나의 전선에 개입할 능력과 의지를 현저히 약화시킨 것이다.

북한 문제도 이런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2003년 바그다드가 함락됐을 때만 해도 승승장구하는 미국이 북한을 다음 표적으로 삼을 거란 추측이 무성했다.

그러나 2004년 4월부터 이라크 팔루자와 나자프에서 동시에 대규모 반점령 항쟁이 발생하고 미군이 제2의 베트남 수렁에 빠진 것이 명백해지자 부시 정부는 북한 문제를 더 키우지 않고 ‘관리’하면서 시간을 벌어야 했다.

물론 대북 압박을 푸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부했다.

아이러니이게도, 부시 정부는 이라크 전쟁으로 압력을 넣으려 한 표적 중 하나인 중국 정부의 힘을 빌어 북한의 반발을 관리해야 했다.

집권 초기 중국을 ‘잠재적 적성국가 1위’로 지목했던 부시 정부는 나중에 역대 미국 정부 중 중국 정부와 (겉으로나마) 가장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연평도 사태 후 오바마 정부의 주된 대책은 중국에 북한을 통제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다. 이것은 오바마 정부가

정책은 공산당에 대한 유화책이나 패배주의적 정책이 아니다”, “확고한 안보 태세가 햇볕론의 전제”라고 주장했다.

손학규가 비록 햇볕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했다가 당내에서 반발을 샀지만, 그에 대한 친노 인사들의 반박도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부 동안 군사력에 많이 투자했다는 식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멘트와 중장비 등 핵심함에 이용될 수도 있는 물자의 대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던 손학규가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이 ‘평화 정당’일 리 없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미국을 도와 파병을 하고 제국주의 정책을 옹호한 친노세력도 평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긴 마찬가지다.



12월 7일 미국 제국주의의 수령 아프가니스탄 최전선을 방문한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승리 비슷한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경제 위기로 재정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전선을 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처지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아쉬운 처지임을 잘 아는 브레진스키는 연평도 사태 직후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오바마가 중국에 협조를 요청할 때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여서는 안 되며 질책이나 경고여서도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신경을 한껏 긁은 대규모 군사 훈련이 끝나자마자 중국 정부를 타박하는 한미일 외무장관 연합 기자회견을 열었다.

견제

이것은 우선, 오바마 정부에 중국을 강제할 다른 지렛대가 없기 때문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압력을 넣을 방법이 별로 없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발이 묶여 또 다른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을 중국 정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 이유는 다른 잠재적 경쟁자와 비교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이 복잡하고 위협적이어서 미국이 이번 사건을 중국을 견제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의 고민 — “도대체 우리 돈줄[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 이 보여 주듯이 미국 정부와 경제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에 의존한다. 중국은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주요 하청기지 중 하나이기도 하다.

동시에 미국 지배자들은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이 기존 미국 중심 질서를 뒤흔드는 축으로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중국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9퍼센트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이것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발언력을 높일 것이다.

더구나, 유럽과 일본 등과 달리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동맹으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들을 상대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카드가 먹히지 않는다.

미국 강경파 인사인 로버트 게이건은 미국이 곤경에 빠진 사이 조용히 영

향력을 확대하는 중국 지배자들에게 약이 바짝 오른 미국 지배자들의 심정을 잘 표현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 해군이 보호하는 세계 주요 해상 무역로를 공짜로 이용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안정시키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을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상황이 안정되면 그곳의 천연자원을 채취하려 달려들 것이다.”

경제 위기는 중국 자본주의와 미국 자본주의의 간 온갖 갈등들 — 무역수지 적자, 환율 등 — 을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증폭시킬 가능성을 높였다.

올해도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섬들의 영토 분쟁 문제를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하나로 지정하고 지역 약소국들을 압박하자 오바마 정부는 바로 이 문제에서 이 나라들의 후원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또, 다오위다오/센카쿠 문제가 미일 방위조약의 대상임을 명백히 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줄다리기는 긴장과 완화를 반복할 것이다. 두 나라 간 갈등의 근본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들이 자발적으로 ‘해피 엔딩’을 만들려고 노력할 거라 기대할 수 없다.

김용욱

강대국들의 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진보진영의 주요 지도자와 원로들이 11월 30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주변국들의 대화”를 촉구하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협의”와 “6자 회담 재개”를 평화적 긴장 해소 방안으로 주장했다.

시국회의 참여자들이 반공적 냉전주의를 부추기는 주류 지배자들과 언론을 거슬러 ‘평화적’ 대응을 촉구한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평화를 바란다면 지금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하듯 무력 대응을 강화해 군사 긴장을 높이는 방식의 대응에 마땅히 반대해야 한다.

평화 수단

그럼에도 “6자회담”과 “서해평화지대”가 실제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 될까?

우선 이 제안들은 남북한 국가와 주변 강대국들에게 평화 정착의 주체가 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의 참가국들은 세계 1~4위의 군사강대국들이다. 그중에서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온갖 침략전쟁을 일으키며 평화를 파괴해 왔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 이런 미국에게 이 지역 패권은 세계 패권 전략의 일부다.

미국은 북한을 악마화해 자신의 주도에 하에 ‘북한 위협’을 관리해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 해 왔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보호하는 척하지만 오히려 북한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며 자기 영향력 아래 넣는 것에 더 열중이다. 러시아는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지역 패권을 유지하려고 침략과 간섭을 불사하는 호전적 국가다.

이 강대국들이 각자의 영향력과 이권을 위해 암투를 벌이는 것이 6자회담의 본질이다. 이 나라들에 한반도 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맡기자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최근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박선원이 폭로한 내용, 즉 한반도 통일 후 중국에 북한 영토를 줄 수도 있다는 미국 관료의 발언은 조선 민중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대국들이 조선의 운명을 결정했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나 해방 후 미소 합의로 말미암은 강제 38선 분단을 연상시킨다.

사실 이번 위기 자체가 6자회담이나 합의문으로 군사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하나의 증거다.

2003년 시작한 6자회담이 지난 7년 동안 거둔 성과는 2005년 9·19합의와 2007년 2·13합의였다. 두 합의 모두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전쟁에 발목 잡힌 상황에서 북핵 폐기와 그에 따른 보상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보여 주는 바는 이 합의들이 휴지 조각이 됐다는 것이다. 합의들을 먼저 어긴 건 언제나 미국 행정부였다.

9·19 합의에 기대를 걸고 있던 일부 진보진영에게 고(故) 리영희 교수는 “합의문의 문구 자체는 우리가 바라던 바다. …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제적인 조약이나 합의를 지킨 사례가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로 미국은 휴전협정을 어기고 한반도에 핵무기를 들여 온 당사자였다.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도 마찬가지다. 경제 협력이 군사 경쟁을 막진 못한다. 제1차세계대전 직전 서유럽 국가들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교류를 하고 있었다.

지금도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채권국가이며 교역량도 매우 큰 나라인데도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남북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협력해 운영해 왔지만 군사 갈등을 막지 못했다.

강대국들과 그 위계체제 안에 있는 한국 정부가 평화를 위해 움직이길 기대하지 말고, 이들에게서 독립적인 반제국주의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김문성

진보신당 내 위험한 주장들

‘안보 무능’이 문제라고 말하는 진보진영 일각의 주장은 우려했다.

가령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 군의 대포들이 왜 유사시에는 새뽕을 쫓고, 허공을 가르는지 의문 투성이일 뿐”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 만에 상승[常勝]의 최정예 우리 군은 연전 연패의 당나라 군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전 대표는 앞뒤 맞지 않게 ‘평화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긴 하지만, “우리 군”의 ‘군사적 무능’을 걱정하는 그의 주장은 호전적 매파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종북주의’ 낙인이 찍힐까 봐 국회의 대북규탄결의안에 기권한 반면,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오히려 반대대표를 던졌다. 그런데 정작 진보신당 안에서 아연실색케하는 주장들이 나온다.

최병천 사회민주주의연대 집행위원은 “나치즘과 파시즘은 ‘무찌르는 것’이 역사적 정의(正義)이지, ‘양비론적’ 평화를 외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며 대북결의안을 찬성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단체 기획위원인 홍기표는 “외국의 포탄이 본토에 떨어진 마당에 …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 요구하는 게 … 무리한 건가” 하고 말하고는 조 대표의 표결로 “반공 정서에 물든 노동계급을 탈환해서 … 수권가능한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는 … 구상이 물 건너 가는것이 아닌가” 하고 비판한다.

이들의 주장은 제1차세계대전에서 제국주의 조국의 수호를 외치며 전쟁을 찬성한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 당들은 제2차세계대전 후에는 혁명을 분쇄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야합했고, 체제에 충성을 바친 대가로 기성 정치권에서 입지를 다졌다.

지금 북한은 세계 민중과 남한 민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이 아니다. 오히려 미국 제국주의와 남한 정부가 진정한 위협 세력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신당 내 온건파들의 주장은 남한 자본주의를 향한 충성심을 과시하고 있는 듯해 몹시 불길하다.

김문성

이들은 지금도 여지없이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은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연일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질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하는 국회 대북규탄결의안도 토 달지 않고 지지했다.

햇볕정책의 이런 모순은 한반도의 긴장이 남한이 통제할 수 없는 세계적 불안정의 일환이라는 데서 비롯한다.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언제나 미국 세계전략의 일부다.

최미진



1999년 1차 서해교전 서해에선 교전을, 동쪽에선 금강산 관광을 하는 모순이 ‘햇볕론’의 실체였다.

파괴적 평화

은행가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다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노동자들이 가혹한 삭감에 반대해 생사를 건 투쟁을 하고 있다. 이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은행가들의 해결책이 노동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아일랜드 구제금융은 아일랜드 정부에게 돈을 쥐 그 돈을 다시 아일랜드 은행과 국제 은행 들에게 주려는 사기다. 구제금융안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납세자들의 돈 1백50억 파운드를 은행가들에 대한 추가 지원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처음에 금융가들은 손실을 보게 될까 봐 전전긍긍했지만, 합의 사항들에 따르면 아일랜드 은행들에 돈을 빌려 준 “우선순위 채권자들”은 1원도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일요일에 장관들은 채권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지게 하는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논쟁했다”라고 보도했다.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은, 그런 조치가 아일랜드에서는 정치적 지지를 받겠지만, 이제 막 시장을 진정시키고 위기를 막으려는 상황에서 또다시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절대 시장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차피 가난한 아일랜드인들이 대가를 치러야 하니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 · 유럽연합 · 유럽중앙은행이 중재한 이 합의는 아일랜드 은행들에 엄청난 돈을 빌려 준 유럽 은행가들을 지켜 주기 위한 것이다.

세계의 무자비한 자본가들은 아일랜드 은행들을 살려 체제가 또다시 휘청거리는 것을 막고자 한다.

그들은 “전염”의 공포를 느낀다. 곧, 은행 시스템의 신뢰성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것을 두려워한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모두 은행가들을 만족시킬 삭감을 밀어붙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벨기에의 채무 보증 비용은 기록적 수준이다.

그래서 유럽 지도자들은 “분수에 넘치게 사는” 국가들을 처리할 항구적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한다.

유럽 전역에서 삭감을 실시할 것이라는 뜻이다.

유럽재정안정기금 최고경영자 클라



11월 27일 10만 명이 참가한 아일랜드 긴축 반대 시위 노동자들의 잠재력을 보여 준다.

우스 레글링은 “극단적인 조건들”이 붙게 될 것이라고 시인했다. 아일랜드는 평균 6퍼센트의 이자를 물고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 그리스에 적용된 금리 5.2퍼센트보다 더 높다.

한 가지 촌극은 영국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이 아일랜드에 거액을 빌려 주면서 “곤경에 처한 친구를 돕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극단적인

실상은 영국 국가는 아일랜드에 추가로 대출해 영국 은행들이 1순위나 2순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왕립은행이 빌려 준 돈만 해도 5백30억 파운드다. 아일랜드가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전 국민에게서 추가로 1천 파운드를 건어야 갚을 수 있는 액수다.

이 때문에 피라나 페일(아일랜드 공화당)과 녹색당 연립정부는 엄청난 정치 위기를 겪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가 붕괴할지도 모르고, 의회에서 긴축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긴축 예산 통과 여부는 정부를 더는 지지할 이유가 없는 두 명의 무소속 의원들에게 달려 있다.[긴축 예산안 중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금 인상안은 12월 7일에 통과됐다. 공무원 임금 삭감, 복지 삭감 등이 포함된 부분은 수일 내에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 기자회견에서 아일랜드 저널리스트 빈센트 브라운은 브라이언 코원 총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총리는 총리의 소속 당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왜 당장 사퇴하지 않는 거죠?”

녹색당은 내년 초 조기 총선 실시를 요구했지만, 동시에 긴축 예산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녹색당 지도자 존 코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사기와 배신을 당했다고 느낀다.” 그의 말이 맞다. 그러나 사람들은 피아나 페일 못지않게 녹색당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낀다.

지난주 보궐선거(정부가 피하고자 했지만 법원 명령으로 실시된)에서 신페인당이 40퍼센트 가까이 득표했다.

이 상황에 고무된 아일랜드 노동조합 운동 부문들은 다가올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는 데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투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당은 은행가들에게 빚을 갚기 위한 삭감 정책을 지지한다.

지난 토요일(11월 27일)에 있었던 거대한 시위는 아일랜드의 세력균형을 은행가 · 사장 들에서 노동자들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 줬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정종수

포르투갈



사진 출처 Paulo Ribeiro

노동자들은 긴축을 거부할 거라고 말한다

주제 비에른 보이드 페르페이트

11월 24일 긴축 반대 총파업이 포르투갈을 뒤흔들었다. 노동자 수백만 명이 노동자전국연맹(CGTP)과 노동자총연합(UGT)이 조직한 파업 행동에 참가했다.

1974년 파시스트 정권을 무너뜨린 혁명 이후 양대 노총이 참가하는 총파업은 이번까지 포함해 단 두 번이었다.

대략 80퍼센트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했고, 수도 리스본은 마비됐다.

파업은 교통 · 보건 · 교육 · 지방정부 · 우편 · 통신 부문을 강타했다.

포르투갈 민중은 주제 소크라테스가 이끄는 소수당 정부인 사회당 정부에 경고장을 보내고 싶어 한다.

사회당 정부는 우파인 사회민주당의 지지를 받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람들은 민중과 노동자를 희생시켜 은행과 금융 부문을 구제하는 유럽연합의 정책들을 반대한다.

급진좌파 정당인 좌파블록과 공산당은 공공부문 임금을 5퍼센트 삭감하고 연금을 동결하고 부가가치세를 21퍼센트에서 23퍼센트로 인상하는 2011년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좌파블록의 조르즈 코스타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파업에 참가한 3백만 명은 사회당 정부와 그들의 우익 파트너, 유럽연합과 IMF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총파업은 긴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는 은행가와 사장 들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대중 투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투쟁은 유럽 전체 투쟁의 일부가 됩니다.”

포르투갈은 유례없는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중 60만 명이 영양실조에 걸렸거나 기아 상태다. 실업자 중 절반만이 국가 보조금을 받는다. 그리고 더 많은 삭감이 예고돼 있다.

일부 학교들은 주말과 방학 기간에도 학교를 열어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생각이다. 학교 급식이야말로 그 아이들이 그나마 제대로 먹는 한 끼다.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한 그 정부가 대기업들이 2010년 연말 전에 주주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했다. 그 결과 기업들은 2011년 예산안에 따라 늘어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노조 지도자들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 반대하는 이번 파업이 투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이 더 많은 공동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했다.

국가는 피켓 대열을 공격했다. 리스본 중앙우체국 피켓 대열을 새벽 5시에 공격해 심각한 충돌이 일어났다.

경찰은 최루가스를 사용해 피켓 대열을 공격했다.

유감스럽게도, 노동조합은 사람들이 리스본 중심가에 있는 후시우 광장으로 모여들었는데도 운동의 힘을 보여 줄 시위를 조직하지 않았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정종수

아일랜드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1990년대 “켈트 호랑이” 호황은 유럽 신자유주의의 성공 스토리로 여겨졌다.

그 호황은 미국의 투자 덕분이었고, 미국 다국적기업들은 아일랜드를 유럽 연합으로 진출하는 관문으로 삼았다.

유럽 인구의 1퍼센트밖에 안 되는 아일랜드가 한때 미국의 대(對)유럽 투자 가운데 25퍼센트를 끌어들이었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이 다른 곳들에서 더 싼 투자 기회를 찾기 시작하면서 돈줄이 마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일랜드 국가는 자산 거품을 키웠다. 2006년에 건설 부문이 국내총생산의 20퍼센트를 차지했다.

노동자 임금 명당 한 명이 건설 산업에서 일했다. 조그만 마을들이 대규모 베드타운으로 바뀌었고 주택 · 호텔 · 사무실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아일랜드 은행들은 여기에 1천억 파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자’

운드 이상을 대출해 줬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중앙과 지방 수준 모두에서 정치인들이 연루된 대형 비리 사건들이 터졌다.

개발업자들이 도시 계획 허가를 따내고 건설 계획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뇌물을 갓다 바쳤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아일랜드 지배계급은 영국 런던 시티(금융업)의 숨겨진 ‘지원부서’ 구실을 하면 유동자금을 더블린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투기 과열

2006년 한 해에만 아일랜드 금융서비스센터(아일랜드 국제금융특구)에 지펀드 4천5백억 파운드가 유입됐다.

이 자금의 70퍼센트 정도는 원래 조세 피난처인 케이먼 군도에 있었던 것이다. 투기 과열이 계속되는 동안 노조 지도자들은 임금 억제에 일조했다.

그들은 그 대가로 권력에 입금을 넣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금 이 시스템이 붕괴했다. 자본가의 당인 피아나 페일이 녹색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녹

사진 출처 소셜리스트 워커

Letter@left21.com

독자토론광장

12월 20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리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립니다.

화물연대 노동자의 편지

노동자를 “제 발 아래 있는” 사람 취급하는 사장들

‘최철원 야구 방망이 폭행사건’을 접하고 동료들은 매우 분개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정말 힘든 조건에서 일합니다. 보통 화물차에 번호를 부여해 주는 회사의 사장 이름으로 화물 노동자의 차가 분류 · 관리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회사의 채권 ·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할부 넣고 내가 돈을 낸 내 차가 압류됩니다. 왜 법이 이따위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옛그제 뉴스를 보니까 2011년에 휴일이 많아서 좋아하는 직장인들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얘기는 판 세상 얘기입니다. 우리는 휴일 개념이 없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정해진 월급이 없고 운송건수당 돈을 받으니까 ‘박리다매’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기름값, 도로비, 차량 관련 세금까지 우리 돈으로 냅니다.

운송업체들은 운송료를 터무니없이 낮춰 놓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량을 주지 않는 횡포를 부립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며 자결한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옛날에는 하루 10시간 일하고 한 달 생활비를 겨우 맞췄다면, 요즘에는 물가는 올랐는데 돈 버는 건 똑같아서 노동시간이 턱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20시간까지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졸음 운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노동조건이 열악한데도 운송업체들은 노동자들을 그저 소모품으로 생각할 뿐,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운송업체들 중에서는 이번에 폭행 사건을 일으킨 엠앰엠 같은 대기업 계열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화물 노동자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화물차 끌고 다니면 다 제 발 아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반말 하기 일쑤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최철원이 화물연대를 탈퇴하지 않았다고 유홍준 동지를 폭행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조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노동조합이 발전해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들이 나서서 불만을 제기하고 실력 행사도 해야만 자본가들이 바뀝니다.

화물 노동자들은 모두 가슴에 한이 있어서 한 번 파업에 나서면 크게 싸웁니다. 우리는 늘 싸울 기회를 버리고 있습니다.

함광식 화물연대본부 경기남부지회장

동희오토 복직 노동자와 한 간담회에 다녀와서

12월 6일 이화여대에서는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듣는다’는 주제로 심인호 동희오토 사내 하청지회 대외협력부장과 간담회가 열렸다.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설립 후 5년 만에 승리를 거뒀다.

간담회에서 사측의 탄압으로 노동조합을 세우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지 생생하게 전해들을 수 있었다.

심인호 동지는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향한 한국 사회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연대를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학생은 정규직 노조의 연대가 안 되는 원인이 노조 지도부의 문제인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할하는 노동 형태 자체에서 비롯한 문제인지 물었다. 심인호 동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 구조 자체에서 비롯했으므로 정규직의 연대가 어렵다고 답했다.

질문한 학생은 정규직 노조가 투쟁으

로 강성해져 오히려 보수화한 것이라면, 비정규직 노조도 강해지면 똑같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심인호 동지는 기아차의 경험을 부정적 사례로 들어,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노조와 별도로 독립해 존재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연대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노위 학생 분회에서 활동하는 한 학생은 이번 현대차 정규직 노조 지도부의 태도를 보고 더는 민주노총 · 금속노조 지도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단결

나는 정부와 기업주가 정규직 · 비정규직을 서로 갈라놓아서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문제를 낳은 근본 원인이지만, 실제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분할 구조를 극복하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를 통한 승리의 경험을 만들고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을 보더라도, 울산 1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파업을 지지해 시위를 벌였고, 1공

장 정규직 대의원들은 온몸으로 대체인력 투입을 막으려고 했다. 울산, 전주, 아산에서도 정규직 노동자들은 잔업거부와 부분파업으로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했다.

이처럼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한 정규직 노조 이경훈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 연평도 사건을 빌미로 한 정부의 탄압에 직면한 것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정규직 · 비정규직 분할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지지와 압력을 끌어내서 투쟁을 자제시키는 지도부의 입지를 줄이고, 연대파업을 건설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배척하는 곳이 아니라면,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단결해서 싸우는 데 더 효과적이다. 비정규직 노조가 따로 있으면 오히려 정규직 노조 지도자들에게 연대하라는 압력을 가하기 더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번 간담회를 다녀와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요구, 의식, 조직의 측면에서 성과를 남기는 것이 이후 투쟁에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느꼈다.

김세란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지지 홍보전 경험

12월 8일 아침 일찍 서울 성수동 현대차 서비스센터 앞에서 비정규직 조합원 동지와 다함께 동부지구 회원들이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지지 홍보물을 함께 배포했다.

“원 · 하청 공동 총파업으로 함께 싸워 갑시다!”라는 홍보물을 나눠주는 조합원 동지의 모습을 보면서 추위에 움츠려 있던 몸을 활짝 펴고 섰다. 포크레인이 뚫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살 에는 추위와 싸우며 공장을 지키는 1공장의 동지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홍보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도 전에 술냄새가 진동하는 운영팀장이 나

와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길을 막지 말라고 행패를 부렸다. 사진 촬영을 하던 다함께 활동가의 카메라를 뺏고 여성 활동가의 먹살을 잡으면서 위협했다. 나중에는 경찰까지 부르며 난리를 쳤지만 우리는 굴하지 않고 8시 30분까지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했다.

조합원 동지는 “공장에서는 한 명이 가져가면 돌려서 보니까 너무 걱정 말라”며 토닥여 주고 주머니에서 따뜻한 손난로를 꺼내 줬다. 그 동지는 돌아가는 길에 “관리자들이 기 못 펴고 도망다니는 그날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이슬기

학생들의 진보적 의식을 자극하는 현대차 투쟁

내가 속한 다함께 명지대 모임 제안으로 진보신당 당원 모임, 민주노동당 당원 모임이 동참한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지지 학내 홍보전을 했다.

홍보전을 하며 학생들과 나는 대화를 통해 정말 많은 학생들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알고 있고, 투쟁을 지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동자가 분신해야만 하는 현실에 대한 분노, 미래의 불안감 등 그 이유는 매우 다양했다.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은 후원금을 모금하고, 12월 4일 울산에서 열린 민중대회에 현대차 기업을 비판하는 팻말을 제작해 참가하기도 했다. 트위터를 통해 팻말 사진을 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조합원이 “명지대학교 쟁”이라고 쓰인 팻말 사진을 찍은 답신을 보내



다함께 사진

오기도 했다.

많은 대학생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며 공감하고 있다. 노동자의 현실이 대학생들의 미래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학생들의 진보적 의식을 자극하고 있다.

박용석

국가인권위는 인권 논문을 시상할 자격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인권연대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 일터에서의 성소수자 차별실태 분석>에 인권 논문 일반부 우수상을 시상하려 했다.

하지만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인권 논문 수상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상을 거부했다.

인권위원장 현병철은 군형법 92조 ‘계간(鷄姦)(동성 간 성행위를 비하하는 말) 및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에 대한 위헌 의견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요즘 만연하고 있는 동성애 혐오 조장 움직임에 동조

한 셈이다.

인권 논문 대상작의 주제는 ‘장애인 금제도의 도입과 장애인의 소득보장’이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경찰력으로 짓밟은 인권위원회가 시상할 자격이 있을까. 인권옹호자인 양 생생이나 내려는 인권위의 인권논문 시상을 거부한 수상자에게 박수를 보낸다.

인권위는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들이 그나마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돼야 한다. 수상 거부는 단순히 상을 받지 않겠다는 소극적 목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현병철 위원장에 대한 분명한 사퇴 요구다. 현병철이 어서 사퇴하길 바란다.

이서영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사회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서울 동부 사회포럼
연평도 사태 - 동북아시아는 어디로?

연사: 김용욱 <레프트21> 기자
일시: 12월 15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건국대학교 문과대 212호
참가비: 3천 원 (학생 1천5백 원)
문의: 010-9372-2746

서울 서부 사회포럼
비정규직 차별, 어떻게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연사: 윤종희(기흥전자 조합원) 정중남(다함께 활동가)
일시: 12월 16일 (목) 오후 8시
장소: 가톨릭청년회관 CYC 4층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324-3400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신자유주의의 대안 -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연사: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일시: 12월 23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해화역 4번 출구 3분 거리, CGV 옆 건물)
참가비: 2천 원 (음료 제공)
문의: 070-8113-8541 / 010-8481-2626

서울 남부 사회포럼
연평도 포격과 한반도 위기 - 원인과 전망

연사: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계간 <마르크스21> 편집자)
일시: 12월 23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강남스타디 612호 (강남역 6번 출구 외환은행 건물 6층)
참가비: 3천5백 원 (학생 2천5백 원)
문의: 010-2401-1987

경기 남부 사회포럼
연평도 포격과 한반도 위기 - 원인과 전망

연사: 최미진 <레프트21> 기자
일시: 12월 17일 (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역 지하상가 1번 출구 먹자골목 지나서 농협4거리 왼쪽 ‘도방’ 건물)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6663-0032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광진구 종곡4동 93-49 2층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atgwestmail@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h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70-8113-8541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ibforum>
서울 종로구 송인2동 201번지 13호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잠정 평가

노동자 투쟁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 주다

11월 15일 용역 깡패를 동원해 동성기업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경찰에 넘길 때만 해도 정몽구는 이런 사태를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몽구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 서도 가장 강성이라는 동성기업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아 나머지 노동자들의 기를 꺾으려 했다.

그러나 “초장부터 위력을 과시해”(울산 중부경찰서) 승기를 잡으려던 정몽구의 시도는 반격에 직면했다. 관리자들과 대치하다가 1공장으로 몰려 들어간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그 자리에서 점거파업을 시작 했다.

현대차 사측은 IMF 이후 급속하게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비정규직의 수는 순식간에 1만여 명으로 늘었다.

비정규직은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반면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귀족노조’라는 질타에 움츠러들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고 사측은 이 틈을 이용해 이간질해 왔다.

그런데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혼용생산(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것에)하는 2년 이상의 비정규직은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순식간에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하는 노동자들로 현대차 울산·전주·아산공장이 들쭉였다. 3개월 만에 1천1백여 명이 비정규직 노조에 가입해 조합원 수가 세 곱빼기나 늘어났다. 그리고 마침내 11월 15일 점거파업이 터져 나왔다.

수백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핵심 공정을 움직이고 연차파업에 들어가자 현대차 사측은 꺾였됐다. 울산 현대차 1공장 전체가 멈춰 버렸고, 차량 생산은 중단됐다.

노동자들은 찬바라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김밥 한 줄과 초코파이 하나도 나눠 먹으며 동지애를 느꼈다.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사내들 5백 명이 함께 있으면서 싸울 용변만 안 된다.”

조합원들의 열기와 압력은 흔들리는 지도부를 잡아 주는 구실도 했다. 그래서 비정규직까지 지도부는 12월 7일 야당당 국회의원까지 가세한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점거파업은 투쟁의 강력한 엔진 구실을 했다. 파업은 아산공장과 전주공장으로도 번졌다. 그래서 현대차 사측은 무려 3천여 명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나아가 점거파업은 전국적 연대를 자극했다.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연대파업이 결정된 것도 점거파업의 효과였다. 전국 곳곳의 수장은 노동조합과 학생회, 사회단체 등이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파업 지지금을 모금했다. 연대 집회도 이어졌다.

국제적 연대도 확산됐다.

여기에 강력한 연대파업이 결합됐다면 저들을 물러서게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대차·기아차와 금속노조의 연대파업이 필요했다. 특히 현대차 정규직의 파업이 핵심이었다. 현대차 한 작업장의 파업이 나머지 금속노조 전체 작업장의 파업보다 한국 경제에 가하는 타격이 더 크기 때문이었다.

정규직 연대의 가능성은 존재했다

그동안 정규직·비정규직 분열 지배는 민주노조 운동을 겨냥한 지배자들의 핵심 무기였다.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조는 ‘귀족노조’라고 매도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 투쟁은 힘드니까 ‘정규직의 양보’를 얘기했다.

그러나 현대차에서 “너희가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진다”며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한 정규직 활동가와 일부 노동자들의 모습은 이런 주장을 반박했다. 일부 대의원들은 부상을 무릅쓰며 구사대와 몸싸움을 했다. 1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나온 빵과 라면을 비정규직 농성자들에게 전달했다. 전 공장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 모금만 3천만 원이나 됐다.

1공장에서는 정규직 조합원 5백 명이 모여서 지지 집회도 열었다. 정규직 대의원과 현장위원, ‘현장조직’들의 지지 방문도 계속 이어졌다.

한 정규직 대의원은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도와야 한다고 난리”라고 했다. 정규직 반장 중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인 아들을 둔 사람만 3백 명이라고 했다.

많은 정규직 조합원들은 사측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고용 불안을 조장하는 데 이용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우파 성향인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마저 ‘아름다운 연대’를 말해야 했다. 7개 ‘현장조직’들이 파업 지지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런 분위기의 반영이었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확대 강화하면서 연대파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았다.

파업 파괴자 구실을 한 이경훈 집행부

현대차지부 지부장 이경훈은 원래 1990년대 초 친사측 우파 노조 지도부인 이영복 집행부에서 수석 부위원장였다. 이영복 집행부는 양승수 열사 분신 투쟁 때 노골적으로 사측의 편을 든 것으로 악명 높다.

2009년 민주파들의 무기력과 분열을 틈타 지부장에게 당선된 그는 “노조는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파업 초기에 정규직 조합원들과 여론의 눈치를 봐 ‘아름다운 연대’를 말하며 연대 사능을 했다. 그는 그런 시늉 뒤에서 사실상 파업 파괴자 구실을 했다.

현대차 ‘현장조직’인 ‘현장노동자평의회’가 지적했듯이 “이경훈 지부장은 사측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까지 자처하고 나섰다.”

물론 그는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했고 비정규직 농성장에 식량도 전달했다. 하지만 그것은 겨우 하루에 김밥 한 줄에 불과했다. 더구나 그는 김밥과 함께 압력으로 전달했다.

‘정규직화’ 요구는 다음으로 미루자’거나 ‘농성을 해제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양보안을 ‘받지 않으면 손 떼겠다. 그러면 음식도 올라 오지 않을 것’이라는 협박도 했다. 그래서 농성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경훈의 별명은 “악질 산타”였다.

이경훈은 두 가지를 계속 시도했다. 하나는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강요하기 위한 몇 차례의 밤샘 회의는 이상수 비정규직지회장에게 거의 고문과 같았다.

자신의 결사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금속노조 연대파업을 무산시키는 데도 일심이었다. 결국 금속노조 연대파업은 계속 연거뒀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말에 열린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 때 좌파 ‘현장조직’들이 이 경훈에게 연대파업을 강제할 수 있는 안건을 발의하거나 현장에서 선통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이경훈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부도 총금영훈 지도부도 이경훈의 이런 행태를 무기력하게 묵인·방조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교섭에서는 여자가 있어야 한다. 불파 교섭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이경훈을 거들었다.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울산 집회에서 다 함께 회원들이 든 “이경훈은 품들이지 말고 연대 파업하라”는 팻말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외부세력’ 마녀사냥이 노린 것

이경훈은 자신의 배신적 행태를 비판하며 비정규직 투사들의 투지를 고무하는 사람들을 ‘외부세력’이라며 마녀사냥했다. 이경훈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부원이 농성장을 방문해 지지 연설하는 걸 보고 “외부인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며 화를 냈다.

금기야 11월 28일에는 파업에 연대하던 울산연대노조 권우상 전 사무국장이 이경훈에게 구타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경훈은 11월 30일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에서 “외부인이 순박한 조합원에 게 연대의 차원을 넘어서 직접 참여하고 있



마지막 보고대회 이 투사들은 정몽구를 넘어뜨리지는 못했지만 25일 동안 승물을 조일 수 있었다.



25일 만의 만남 이 눈물과 설움은 다시 폭발할 것이다.

다”며 연대 단체들을 비방했다. 그리고 “외사측의 사주에 따른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어서 12월 1일 일명통신사인 《뉴스스》는 “현대차가 사노위, 노동전선 등과 싸우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뉴스스》는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 실행위원회)와 노동전선 ... ‘다함께’ 등을 외부세력으로 지목했다.

이들 단체가 “공장 안팎에서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함께는 ... 기관지인 (레프트21)과 연계해 사내 계입 능력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순한 외부세력’의 사주에 따른 것으로 매도하고 연대 단체와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한 것이 다. 이런 마녀사냥을 통해서 이경훈과 현대차 사측이 노린 것은 명백했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더 강력한 단결과 투쟁을 호소하는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것이었다.

이경훈을 거두고 나선 야당 국회의원들

12월 7일 저녁 민주당 홍영표, 국민참여당 김경태와 함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현대차를 방문했

다. 이들 ‘야4당 교섭지원단’은 먼저 현대차 부인[을] ... 본격적으로 세출”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12월 6일 일명통신사는 3백여 명의 비정규직지회 지도부를 만났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가 제기한 ‘신뢰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현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

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문구가 두루뭉술해 중재 내용이 애매하지만 크게는 야4당이 신뢰 문제를 보증하고 선 농성 해제를 통한 교섭 제안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간담회 참석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끊임없이 ‘이경훈을 반대하라’며 ‘연대파업은 어렵다. 동력이 있을 때 마무리하는 게 낫다’는 등의 ‘설득’을 했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다시 농성해 압박에 시달렸다.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장 중에서 가장 단호하게 투쟁적 태도를 고수하는 송성훈 아산 비정규직지회장은 이경훈 집행부의 차단으로 아예 이 자리에 참석하지도 못했다. “양보안인데 반대만 할 거면 출입시켜 줄 수 없다. 입장이 바뀌면 연락하겠다”는 거였다.

민주당이 파업 파괴자 구실을 하는 것은 변한 일이다. 근로자 파견법과 비정규직 약

법을 만든 장본인이고 기업주들을 대변하는 당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의원들이 여기에 동참한 것은 통탄할 일이었다. 노동조합 상층 간부에 기반한 개혁주의 정치인들이 중재자 구실을 자처한 것이다.

이것은 반이명박 민주연합의 한심한 실체를 보여 준 사례이기도 하다. 민주당과 손잡은 개혁주의자들이 이명박에게 맞서는 노동자 투쟁을 오히려 가라앉힌 것이다. 농성 노동자들도 분통을 터뜨렸다. “차라리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해라”, “한숨만 나온다.”

투쟁은 어떻게 꺾였는가

현대차 사측의 폭력 탄압,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의 공격, 출고 배고프고 정지도 안 들어오는 농성자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은 지쳐 갔다. 그러나 노동자들

을 무엇보다 힘들게 한 것은 ‘같은 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압박이었다.

이경훈의 거듭된 농성 해제 압박, 그 것을 거두고 있는 금속노조 지도부의 한심한 모습, 보이지 않는 민주노총 지도부를 보면서 노동자들은 실망했다. 갈수록 투쟁의 김은 빠졌다.

그래서 농성자들의 구모는 처음에 5백여 명에서 12월 6일쯤에는 3백여 명으로 줄어 있었다. 이렇게 꺾어진 조건에서 여전히 3백여 명이 남아 있는 게 놀라운 일이었다.

12월 7일 ‘야4당 교섭지원단’의 설교에서 12월 9일 도열해 있는 정규직 대의원의 격려를 받으며 농성장에서 내려온 투사들은 곧바로 현대차 본관 앞으로 가서 항의 집회를 했다. 공장 안에서 천막 농성도 시작했다. 사측과 경찰도 ‘불법 점거’를 한 노동자들을 감히 연행하지는 못했다.

“아부 소득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마음껏 소리쳤고 비정규직의 무서움을 세상에 알렸으니까요.” “동지들하고 투쟁해서 영광이었습니

다. 내가 이런 투쟁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정규직도 못 한 투쟁을 우리가 훌륭하게 했어요. 이 투쟁을 평생 자랑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25일간의 초인적 투쟁을 끝낸 노동자들은 화장실도 눈치보며 가던 노동자가 이제 더는 아니다.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은 투쟁의 담금질을 거쳐 강박해졌다. 사실 ‘불법파견 정규직화’는 만만치 않은 요구였다. 한 노동자는 “정몽구 뒤에

12월 8일 밤은 농성자들에게 정말 괴로운 밤이었다. 하루 종일 굶은 노동자들은 전기가 끊겨 컴컴하고 적막하고 차디찬 농성장에서 고뇌했다. 이경훈은 사실상 연대 중단을 선언했고, 밥은 들어오지 않고, 투표 결과는 어둡고, 농성장 수가 다시 50명 이상 줄었다.

다음 날 아침, 이경훈과 금속노조 지도부는 괴로운 밤을 보낸 농성자들에게 다시 양보안을 강요했다. ‘고소고발·순해배상·치료비 해결, 농성자 고용보장, 비정규직지회 지도부 신변보장, 불법파견 교섭 대책 요구를 위해 교섭을 하면서 농성은 해제한다’는 안이었다. 이 안을 받으면 투표 결과를 개표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투표는 철회야 했다.

비정규직 투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그만을 수용했다. 더는 대안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이 대단한 투쟁은 이렇게 일단락됐다.

이 투쟁에 가슴 벅차하며 희망과 기대를 걸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결과에 실망할 것이다. 패배감과 비관주의에 빠질 지도 모른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패배하지 않았다. 12월 9일 도열해 있는 정규직 대의원의 격려를 받으며 농성장에서 내려온 투사들은 곧바로 현대차 본관 앞으로 가서 항의 집회를 했다. 공장 안에서 천막 농성도 시작했다. 사측과 경찰도 ‘불법 점거’를 한 노동자들을 감히 연행하지는 못했다.

“아부 소득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마음껏 소리쳤고 비정규직의 무서움을 세상에 알렸으니까요.” “동지들하고 투쟁해서 영광이었습니

다. 내가 이런 투쟁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정규직도 못 한 투쟁을 우리가 훌륭하게 했어요. 이 투쟁을 평생 자랑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25일간의 초인적 투쟁을 끝낸 노동자들은 화장실도 눈치보며 가던 노동자가 이제 더는 아니다. 노동자들의 의식과 조직은 투쟁의 담금질을 거쳐 강박해졌다. 사실 ‘불법파견 정규직화’는 만만치 않은 요구였다. 한 노동자는 “정몽구 뒤에

12월 8일 밤은 농성자들에게 정말 괴로운 밤이었다. 하루 종일 굶은 노동자들은 전기가 끊겨 컴컴하고 적막하고 차디찬 농성장에서 고뇌했다. 이경훈은 사실상 연대 중단을 선언했고, 밥은 들어오지 않고, 투표 결과는 어둡고, 농성장 수가 다시 50명 이상 줄었다.

다음 날 아침, 이경훈과 금속노조 지도부는 괴로운 밤을 보낸 농성자들에게 다시 양보안을 강요했다. ‘고소고발·순해배상·치료비 해결, 농성자 고용보장, 비정규직지회 지도부 신변보장, 불법파견 교섭 대책 요구를 위해 교섭을 하면서 농성은 해제한다’는 안이었다. 이 안을 받으면 투표 결과를 개표하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투표는 철회야 했다.

비정규직 투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그만을 수용했다. 더는 대안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이 대단한 투쟁은 이렇게 일단락됐다.

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정규직 연대파업이 결합되지 않아서 이 투쟁은 성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젊은 투사들의 초인적인 투쟁은 지배자들을 놀라게 했다. [조선일보] 노설실장 송희영은 “비정규직[이] ... 공지는 저항 운동에서 80년대 말 노동 운동의 초기 증상을 보는 기분”이라고 두려워했다.

이번에 현대차 사측은 ‘사내하청은 우리 직원이 아니고 교섭 대상도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을 교섭 상대로 인정하는 “대승적 결단”을 해야 했다.

물론 현대차 사측은 곧바로 ‘성실 교섭’ 약속을 뒤집고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며 아비한 보복에 나설 것이다. 한 노동자도 “현장에 내려가면 탄압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비정규직 투사들은 곧바로 전열을 정비해서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했던 활동가들도 이 투쟁을 돌아보며 마음을 다져야 한다. 이번 투쟁은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 투쟁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줬다. 그러나 동시에 그 투쟁이 더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노조 관료주의와 개혁주의 정치의 문제점도 보여 줬다.

이 투쟁에서 이경훈은 정몽구의 위로부터 압력을 투사들에게 전달하며 투쟁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도 정몽구의 압력을 전달하는 고리 구실을 했고, 민주당과 손잡은 개혁주의 정당인 이경훈과 정몽구는 그것을 거들었다.

이런 압력에 맞서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유지하며 연대를 확대하려면 아래로부터, 왼쪽에서 더 강력한 압력을 만들어야 했다.

이번 투쟁에서 다함께,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행위원회, 혁명적노동자정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등과 많은 전투적 활동가들은 그런 구실을 하려고 노력했다.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 갈수록 깊어지고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경제 위기고 통전기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쟁의 기회는 앞으로 계속 다가올 것이다.

활동가들은 앞으로 다가를 투쟁의 기회들을 더 성공적으로 움직일 정치적 준비를 해야 한다.

사측은 노동조합을 이념이

노조 상근 간부층은 왜 그토록 보수적인가

대놓고 연대를 차단하고 투쟁을 통제한 현대차 이경훈 지부장과 중재에 매달린 금속노조·민주노총 지도부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상층 노조 지도자들은 왜 황금 같은 투쟁의 기회가 왔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때로는 반동적으로, 또는 기껏해야 소심하게 행동하는가?

이것은 이들 개인의 보수적 품성이 나약함 때문이 아니다(물론 그런 지도자들도 적잖지만 말이다). 그보다는 노조 상근 간부층이 처한 사회적 지위 자체가 이들을 투쟁 회피로 내몰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조합은 기업주와 정부의 공격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임금·고용·노동조건 등을 방어하기 위한 훌륭한 투쟁 무기다. 그래서 1987년 거대한 파업 물결 속에서 노동자들은 수백여 개의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소외의 원인인 자본주의의 체제 그 자체에 도전하는 혁명적 기구는 아니다. 노조는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착취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맞서고, 착취 그 자체가 아니라 착취의 조건을 놓고 투쟁하고 협상한다.

노조 상근 간부층은 바로 이 임무를 담당하는 협상 중재자다. 그는 노동자와 기업주 사이에서 타협의 조건을 놓고 줄타기하는 특수한 사회계층이다.

기업주와 만나 협상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는 노조 상근 간부층은 기업주와 일정한 협력을 도모하기도 한다. “기업주들은 노조의 지위를 인정하는 대가로 ‘책임 있는 노조 지도자’를 요구하고, 노조 지도자들은 [이에 응해] 조합원들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

노조 상근 간부층은 중재와 화해를 최고로 삼는 노조 상근 간부층은 기업주와 일정한 협상이 더 많은 것을 따내는 열쇠라고 믿는다. 협상의 노하우, 중재 루트, 타협의 정도 등은 성패를 가름할 준거가 되고, 투쟁은 이런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고 노조 조직을 파괴하는 골치아픈 일로 여겨지게 된다.

민주노총 임성규 전 위원장은 이런 심정을 반영해 “노동조합은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든 자본이든 협상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옥죄며 교섭을 위해 농성을 중단하라고 압박하는 꼴지아픈 일로 여겨지게 된다.

이런 압력에 맞서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유지하며 연대를 확대하려면 아래로부터, 왼쪽에서 더 강력한 압력을 만들어야 했다.

이번 투쟁에서 다함께,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행위원회, 혁명적노동자정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등과 많은 전투적 활동가들은 그런 구실을 하려고 노력했다.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 갈수록 깊어지고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경제 위기고 통전기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쟁의 기회는 앞으로 계속 다가올 것이다.

활동가들은 앞으로 다가를 투쟁의 기회들을 더 성공적으로 움직일 정치적 준비를 해야 한다.

이들은 강력한 투쟁이 벌어져 국가에 도전

전하게 될 때마다 번번이 뒷걸음질쳤다. 산별·연맹 지도자들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만이 아니라, 이랜드 투쟁, 쌍용차 투쟁, KBC 투쟁 등 점거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농성 해제를 압박했다. 같은 이유에서 투쟁을 확대하자고 선동하는 좌파들은 노동조합을 불안정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외부세력’로 비난받는다.

또 노조 지도자들은 공공연하게 양보를 선언하기도 했다. 1997~98년 IMF 위기 당시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합’으로 정리해고를 용인하고, 2008년 말 경제위기기가 시작되자 금속노조 지도부가 “임금 동결과 삭감도 의논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이 한 사례다. 지금 노조 상층 지도자들은 대용·노동조건 등을 방어하기 위한 훌륭한 투쟁 무기다. 그래서 1987년 거대한 파업 물결 속에서 노동자들은 수백여 개의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소외의 원인인 자본주의의 체제 그 자체에 도전하는 혁명적 기구는 아니다. 노조는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착취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맞서고, 착취 그 자체가 아니라 착취의 조건을 놓고 투쟁하고 협상한다.

노조 상근 간부층은 바로 이 임무를 담당하는 협상 중재자다. 그는 노동자와 기업주 사이에서 타협의 조건을 놓고 줄타기하는 특수한 사회계층이다.

기업주와 만나 협상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는 노조 상근 간부층은 기업주와 일정한 협력을 도모하기도 한다. “기업주들은 노조의 지위를 인정하는 대가로 ‘책임 있는 노조 지도자’를 요구하고, 노조 지도자들은 [이에 응해] 조합원들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

노조 상근 간부층은 중재와 화해를 최고로 삼는 노조 상근 간부층은 기업주와 일정한 협상이 더 많은 것을 따내는 열쇠라고 믿는다. 협상의 노하우, 중재 루트, 타협의 정도 등은 성패를 가름할 준거가 되고, 투쟁은 이런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고 노조 조직을 파괴하는 골치아픈 일로 여겨지게 된다.

민주노총 임성규 전 위원장은 이런 심정을 반영해 “노동조합은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든 자본이든 협상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옥죄며 교섭을 위해 농성을 중단하라고 압박하는 꼴지아픈 일로 여겨지게 된다.

이런 압력에 맞서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유지하며 연대를 확대하려면 아래로부터, 왼쪽에서 더 강력한 압력을 만들어야 했다.

이번 투쟁에서 다함께,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행위원회, 혁명적노동자정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등과 많은 전투적 활동가들은 그런 구실을 하려고 노력했다.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 갈수록 깊어지고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경제 위기고 통전기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쟁의 기회는 앞으로 계속 다가올 것이다.

활동가들은 앞으로 다가를 투쟁의 기회들을 더 성공적으로 움직일 정치적 준비를 해야 한다.

이들은 강력한 투쟁이 벌어져 국가에 도전

전하게 될 때마다 번번이 뒷걸음질쳤다. 산별·연맹 지도자들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만이 아니라, 이랜드 투쟁, 쌍용차 투쟁, KBC 투쟁 등 점거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농성 해제를 압박했다. 같은 이유에서 투쟁을 확대하자고 선동하는 좌파들은 노동조합을 불안정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외부세력’로 비난받는다.

또 노조 지도자들은 공공연하게 양보를 선언하기도 했다. 1997~98년 IMF 위기 당시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대화합’으로 정리해고를 용인하고, 2008년 말 경제위기기가 시작되자 금속노조 지도부가 “임금 동결과 삭감도 의논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이 한 사례다. 지금 노조 상층 지도자들은 대용·노동조건 등을 방어하기 위한 훌륭한 투쟁 무기다. 그래서 1987년 거대한 파업 물결 속에서 노동자들은 수백여 개의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소외의 원인인 자본주의의 체제 그 자체에 도전하는 혁명적 기구는 아니다. 노조는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착취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맞서고, 착취 그 자체가 아니라 착취의 조건을 놓고 투쟁하고 협상한다.

노조 상근 간부층은 바로 이 임무를 담당하는 협상 중재자다. 그는 노동자와 기업주 사이에서 타협의 조건을 놓고 줄타기하는 특수한 사회계층이다.

기업주와 만나 협상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는 노조 상근 간부층은 기업주와 일정한 협력을 도모하기도 한다. “기업주들은 노조의 지위를 인정하는 대가로 ‘책임 있는 노조 지도자’를 요구하고, 노조 지도자들은 [이에 응해] 조합원들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

노조 상근 간부층은 중재와 화해를 최고로 삼는 노조 상근 간부층은 기업주와 일정한 협상이 더 많은 것을 따내는 열쇠라고 믿는다. 협상의 노하우, 중재 루트, 타협의 정도 등은 성패를 가름할 준거가 되고, 투쟁은 이런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고 노조 조직을 파괴하는 골치아픈 일로 여겨지게 된다.

민주노총 임성규 전 위원장은 이런 심정을 반영해 “노동조합은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든 자본이든 협상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옥죄며 교섭을 위해 농성을 중단하라고 압박하는 꼴지아픈 일로 여겨지게 된다.

이런 압력에 맞서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지를 유지하며 연대를 확대하려면 아래로부터, 왼쪽에서 더 강력한 압력을 만들어야 했다.

이번 투쟁에서 다함께,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행위원회, 혁명적노동자정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등과 많은 전투적 활동가들은 그런 구실을 하려고 노력했다.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 갈수록 깊어지고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경제 위기고 통전기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쟁의 기회는 앞으로 계속 다가올 것이다.

활동가들은 앞으로 다가를 투쟁의 기회들을 더 성공적으로 움직일 정치적 준비를 해야 한다.

이들은 강력한 투쟁이 벌어져 국가에 도전

박설

한미FTA는 사회 공익과 민주주의를 공락한다



한미FTA 재협상의 “이익균형”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우석균**은 한미FTA의 진정한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한다. 우석균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자 한미FTA저지범국민 정책위원이며 본지의 칼럼니스트다.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이 봐도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MB조차 “한미FTA를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이번만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문 관세 철폐로 얻는 이익이 한미FTA로 얻을 가장 큰 이익이라고 선전해 온 정권이 한국이 내는 관세는 5년간 유예하고 미국이 내는 관세는 즉시 내리는 재협상을 했으니 잘못했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잘못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는 미국 현지생산이 많으므로 관세철폐가 없어도 수출은 잘될 것이라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미FTA는 왜 중단 말인가? 지식경제부가 이번엔 내놓은 설명 자료를 보면 자동차 관세 철폐가 없어도 자동차 ‘부품수출’로 얻는 이익이 연 8억 1천만 달러로 재협상 전보다 1달러도 줄지 않는다고 예측한다. 숫자 놀음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지만 정도가 좀 심하다 싶다.

계산

돼지고기 관세 철폐 유예를 얻어냈다? 2007년에 맺은 협정이니 이제 3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당시 2014년 관세 철폐라고 정한 조항에서 유예기간 2년을 받아 왔으면 1년 손해라고 계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계산이 아닐까? 게다가 2014년이 관세 철폐 기한인 삼겹살, 소시지 등 20개 항목은 그대로 남았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유예? 2007년 5월에 민주당은 ‘신통상정책’을 통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를 독소조항으로 지목해 파나마, 콜롬비아 FTA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그런데 한국은 3년 유예를 자랑으로 내세운다. 여러모로 ‘참 잘한’ 재협상이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는 원-원이라고 한다. 한국 자동차공업협회도 환영 성명을 냈고, 전경련도 “한미FTA가 가져다 줄 막대한 경제적, 정치 외교 · 국가안보적 이익”을 위해 조속히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번 재협상이 이익의 균형을 꺾으므로 문제라고 한다. 그것만 빼면 괜찮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원래의 한미FTA가, 그리고 이제 재협상까지 포함한 한미FTA가 가져다주는 ‘이익’과 ‘국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제 다시 한미FTA를 되돌아보자.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이 자동차 관세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찬성하는 것에서 잘 보여 주듯이 한미FTA는 단순히 자동차나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한 협정이 아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오히려 ‘비관세장벽’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공익’이라고 부르는 것을 해체하는 것이다.

한미FTA는 지금까지 공공영역으로 남아 있던 분야를 민영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영역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우선 한미FTA는 서비스 분야를 포괄적으로 개방한다. 여기에 이른바 “래치”이라 불리는 역진 방지 조치까지 있다. 즉 한 번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는 이를 되돌릴 수 없는, 이른바 ‘낙장불입’ 조항이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 분야는 상품 이외의 모든 분야를 말한다. 상하수도 · 전기 · 가스 · 철도 · 지하철 · 도로 · 방송 · 공항 · 항구는 물론이고 교육과 의료, 연금과 사회보장, 심지어 교도소와 국가 안보까지 모든 부문이 서비스 분야다. 한마디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닌 모든 생활 분야가 서비스 분야다.



연평도 사태를 백분 활용해 한미FTA를 처리해버린 오바마와 이명박

한미FTA는 이 모든 서비스 부문 중 유보 조항 즉, 보류한다고 적어 놓은 조항 외의 모든 분야는 앞으로 규제를 할 수 없게 만든다. 한마디로 기업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또 보류 조치라고 적어 놓는다고 해도 ‘현재유보조항’에 적어 놓으면 지금의 규제보다 더 강화할 수 없다.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보장성이 낮아 70~80퍼센트의 가구가 한미FTA의 민영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 규모도 12조 원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의 40퍼센트에 이른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민영의료보험에 규제가 없다. 민영보험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민영의료보험은 보험료를 1백 원을 받으면 70원은 가입자에게 주도록 하는 지급을 규제가 있고 정부가 정하는 상품을 꼭 팔도록 하는 표준화 규제가 있다. 유럽의 규제는 이보다 훨씬 엄격하다.

지금 한국에서는 민영의료보험이 보험료를 받아 가입자에게 얼마나 되돌려주는지, 얼마나 많은 가입 거절과 보험금 지급 거절이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앞으로 민영의료보험 규제는 불가능하다. 서비스 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규제하지 않은 분야 그리고 지금까지 개방한 분야에서 규제 강화는 불가능하다. 전기 · 상하수도 · 가스 분야에서 이미 많은 부분이 민영화됐다. 예



2007년 한미FTA 반대 시위

를 들어 영국에서는 철도를 민영화한 후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 탓에 운영이 엉망이 되자 철도를 재국유화했다. 상수도 민영화 후 재국유화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무수히 많다. 그러나 한미FTA 협정 후에는 한국이 민영화한 부문을 재국유화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거나 지극히 어렵게 된다. 이것이 누구의 이익이며 누구의 ‘국익’인가.

더욱이 ‘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도 있다. SSM[기업협 슈퍼마켓] 규제를 보자. 여야가 합의해 SSM을 규제하려 했을 때 김종훈 본부장이 한EU FTA 위반이라는 한마디를 던지자 모든 일이 없던 일로 됐다. 한EU FTA에서는 영국 정부가 영국의 테스코를 대신해 한국 정부에게 소송을 걸 수 있지만 한미FTA는 더하다.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를 직접 제소하면 뉴욕에서 변호사 3명에게 판결을 받아야 한다. 바로 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다.

2004년 4월 캐나다의 뉴 브런즈윅에서 의회가 자치단체 정부에게 공적 자동차보험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보험료가 2백20~9백93달러까지 줄어든다는 것이 그 이유였고 또 브리티쉬컬럼비아나 사스카완 주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이 이를 정부 조치에 의한 간접몰수라며 소송을 한다고 협박해 이 조치는 시행되지 못했다. 캐나다에서만 온타리오에 이어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한미FTA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떤 FTA에도 없던 조항까지 넣어 놓았다. 한미FTA의 “투자계약”이라는 조항에는 “투자자가 전력 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 운하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사업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로 못 박는다. 또 정부의 조치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잠식되면 이를 정부의 간접몰수(간접수용)라고 규정한다.

한국 정부는 보건 · 환경 · 공기업 · 사회보장 등은 ‘미래유보조항’이므로 정부

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러려면 엄청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그 때문에 캐나다의 뉴 브런즈윅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는 한 번 민영화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까? 암이나 중대장병에 대한 보장성을 더 올리면 암보험이나 중대장병보험은 손해를 본다. 국민연금을 강화해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보험회사 사장이라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사회보장 강화는 물 건너가거나 어려워진다. 사회보장 강화를 전제로 하는 복지국가는 당연히 물 건너간다.

한미FTA를 받아들이면서 복지국가를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FTA는 상업화와 민영화로 가는 편도열차 티켓(one way ticket)일 뿐이다.

투자자 정부 제소를 할 수 있는 기업은 미국 기업이 아니라 투자자라는 것에도 주의해야 한다. SSM 규제를 어렵게 한 한EU FTA에서도 홀플러스는 한국 기업이지만 그 지분을 가진 영국 기업 테스코가 문제가 됐다. 한국의 대기업 중 외국 투자자 지분이 없는 기업도 있는가? 당연히 한국 기업 모두가 한미FTA의 수혜자다.

한미FTA는 모든 공공영역과 모든 기업규제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 분야 포괄 개방, 역진 방지, 투자자 보호 장치와 이를 강제하는 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를 갖춘 기업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다. 전경련과 대기업들이 자동차 부문의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공공영역과 규제 조치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얻게 되는데 이들이 만세를 부르지 않을 까닭이 무엇인가.

‘원-원 협정’

그뿐만이 아니다. 의약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강화, GMO 규제 대폭 완화, 금융 셰이프가드의 사실상의 무력화 등 한미FTA는 일부 독소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민중에게는 재앙인 협정이다.

한미FTA가 원-원 협정이고 국익을 위한 협정이라고? 한국과 미국의 자본 · 대기업에게는 원-원이며 그들의 이익을 위한 협정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말은 맞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민중에게 한미FTA는 그들의 ‘국익’을 위한 협정일 뿐이다(한미FTA에 대한 환영 의사를 표현한 미국 자동차노조 위원장이 미국 노동운동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의 ‘국익’을 놓고 벌이는 한판 싸움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재협상으로 인해 ‘이익의 균형’이 깨진 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익’과 ‘국익’은 양국 대기업과 자본의 이익일 뿐이다.

한미FTA가 철폐해야 한다고 말하는 무역장벽은 바로 사회의 공익이며 민주주의 그 자체다. 더욱이 ‘안보를 위한 한미FTA’라는 해괴한 논리는 한미FTA라는 괴물에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 위험까지 덮어 얹어 온 것이니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한미FTA 폐기 없이 복지국가나 민주주의를 말하는 모든 정치인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당장 한미FTA 폐기가 안 된다고 해서 일부 조항만 고치자거나, 국익에 손상이 가는 재협상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사회운동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한미FTA 폐기 운동이 절실한 때다.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의 ‘국익’을 놓고 벌이는 한판 싸움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재협상으로 인해 ‘이익의 균형’이 깨진 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익’과 ‘국익’은 양국 대기업과 자본의 이익일 뿐이다.

미국 외교의 잔혹성을 폭로한 위키리크스

25만 건의 미국 외교 이메일이 폭로되자 전 세계 지배 엘리트들이 발각 뒤흔쳤다.

전 세계 정치인들은 이 폭로에 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미국 정치인들은 위키리크스 웹사이트를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폭로된 메일들 중 어떤 것들은 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외교관들에게 세계 정상과 유엔 외교관들을 감시하라고 명령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사실, 그것이 원래 ‘외교’의 영역이 아니겠는가.

또, 영국 방위산업 홍보담당을 자임하는 앤드루 왕자가 한 미국 외교관과 대화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부패하고 멍청하고 후진적이라고 깠본 것도 충격적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든 비밀 정보의 기초가 되는 뒷담화, 가십 거리와 편견으로 가득한 세계를 보여 준다.

리비아의 가다피는 “육감적인” 우크라이나인 간호사와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한다. 기타 등등.

메시지

그러나 이런 진흙탕 밑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 첫째, 외교관들이 수집한 ‘정보’로부터 다름이 시작된다. 예컨대, 그런 정보에 근거를 두고 자유무역을 위해 누구의 일자리가 희생될지 결정된다. 그런 중요한 결정이 그토록 가볍게

내려지는 것은 우리 지배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보여 준다.

지금까지 폭로된 무수한 메일들 중에서 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베를린 주재 미국 대사관이 2007년 발송한 것이다. 이 메일은 당시 독일 주재 미국 공관의 부부장이었던 존 코니히가 독일 국가안보 부보좌관 볼프 니켈을 만나서 말한 내용이다. 코니히는 칼레드 엘 마스리 사건과 관련해 독일 정부가 미국 CIA 요원들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을 거론하면서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에 초래할 파장을 신중히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이탈리아 당국이 동일한 행동을 취했을 때 미국-이탈리아 간 양자 관계가 어떤 타격을 입었는지를 상기시켰다.”

니켈은 “그럴 생각이고 비록 당장은 그럴 수 없지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거라’고 되풀이해 말했다.”

폭로된 문서에는 마스리는 어떻게 됐는지 말하지 않고 있다.

2003년 마지막 날 이 독일 자동차 판매원은 알카에다 용의자와 이름이 비슷하단 이유로 체포됐다. 그는 버스를 타고 세르비아에서 마케도니아로 이동하던 중에 체포됐다. 마케도니아 당국은 그를 CIA 인도 담당자에게 넘겼다.

두건을 쓴 사람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족쇄를 채운 채 보잉 737에 태웠다.

비행기는 이라크 바그다드로 이동했고 미군의 착륙 허가를 받았다.

그 다음 비행기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외곽에 있는 샬트 파트 감옥으로 이



동했다. 마스리는 ‘샴’이라고 불리는 미국 요원에게 반복적으로 심문을 받았다.

그는 제트기 바닥에 사슬로 묶였고 진정제가 주입됐다.

착륙 후에 그는 자동차 트렁크에 실려 어떤 건물로 옮겨졌고 습한 독방에 갇혔다. 그는 그곳에서 4개월 동안 심문, 고문, 성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받았다.

마스리를 납치한 자들은 납치한 지 5개월 뒤에 그를 마케도니아로 되돌려놨다. 납치자들은 2004년 5월 알바니아 국경 근처 어둡고 황량한 도로에서 그를 풀어줬다.

마스리를 태운 비행기 승무원들은 자

기 승객은 꿈도 못 꿀 호감을 누렸다.

폭로된 문서들을 보면, 737기는 마스리를 아프가니스탄 감옥으로 옮긴 뒤 휴양지로 유명한 마요르카 섬으로 날라갔다. 이곳에서 승무원들은 이를 동안 최고급 호텔에서 투숙했다.

코니히가 니켈에게 전달한 미국 측 요청 때문에 마스리를 납치하고 고문한 CIA 요원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진부한 외교 뒤에는 무서운 잔혹함이 숨어 있다.

사이먼 배스케터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번역 김용욱

위키리크스가 연 판도라 상자 속의 한반도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이번에는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 25만 2천2백 87건을 공개했다. 이번에 폭로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들은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를 떠올리게 한다.

이 중 주한 미국 대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도 1천9백80건에 이른다.

한국을 다룬 외교 문서 중 전문가가 공개된 문서는 10여 건이지만, ‘도ку이 제 발 저린다’는 말처럼 정치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대선을 치른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대부분이라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긴장하고 있다. 이명박의 BBK 사건처럼 핵폭탄급 사건의 진실이 전문에 담겨 있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한 문건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한반도 평화에 관심이 없는지 알 수 있다.

동결

지난해 초 주한 미국 대사관이 미국 국무부에 보낸 외교 전문에는 “이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에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임기 말까지 남북 관계를 동결 상태로 남겨둘 준비가 돼 있다”라고 전했다.

당시 외교통상부 2차관인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올 2월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나 “김정일 사후 2~3년 안에 북한이 붕괴할 것”이며 중국 지배자들이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뒷받침하는 통일 한반도에 편안함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북한 붕괴를 확신

하는 한국 외교 관리들의 말들이 실명으로 거론돼 있다.

이런 말들은 〈뉴욕타임스〉가 지적한 것처럼 하나같이 추론과 희망사항에 근거한 것이다. 이처럼 호전적이고 냉전적인 대북관으로 가득 찬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정부에서 한반도를 매 순간 군사적 긴장 상태로 몰아간 대북 적대 정책이 고수된 것은 당연하다.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며 대화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을 뿐 아니라 대북 강경·압박으로 일관해 온 이명박 정부 그 자체가 한반도 평화의 위협 요소인 것이다.

이번 외교문서에는 올해 2월 이명박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을 강행하기까지 오바마 정부와 파병과 재정 지원 규모를 논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오바마 정부는 당시 5억 달러 규모의 전비 지원을 요구했다. 아프가니스탄 육군을 지원하기 위해 5년 동안 해마다 1억 달러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함께 공개된 문서 중에는 오바마 정부조차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의 부패와 무능을 더는 참아낼 수 없다고 푸념한 내용이 들어 있다. 부패하고 억압적인 카르자이 정부와 미국의 패권을 위해 우리가 군대와 돈을 보낼 이유는 없다.

향후 한반도를 다룬 외교 문서 1천 건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문서만 보더라도 미국과 그 동맹국 지배자들의 머릿속에는 하나같이 거짓, 불의, 전쟁 의지만 가득 차 있다.

김덕엽

줄리언 어산지 마녀사냥



12월 7일 영국 경찰이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사진)를 체포했다. 어산지가 스웨덴에서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말이다.

영국 법원은 좌파 영화감독 켄 로치, 저널리스트 존 필즈 등이 보석금으로 28만 달러를 기탁하겠다고 했는데 어산지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영국 법원의 보석 신청 기각으로 어산지는 다음 심리일인 14일까지 영국에서 구금 상태로 지내야 할 것 같다.

이것은 미국 정부가 오스트레일리아 시민권자인 어산지를 미국으로 인도할 방법을 찾을 시간을 벌기 위해서인 듯하다. 미국 정부는 위키리크스의 폭로와 관련해 어산지를 기소하려 한다.

강간과 성폭행은 매우 심각한 범죄지만, 어산지에 대한 세계 열강들의 공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게다가 어산지에 대한 혐의의 세부적 사실들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스웨덴 검찰은 지난 8월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가 수사를 재개했고, 인터폴은 위키리크스가 미국 기밀 문서를 폭로한 직후에 체포 경보를 발령했다.

따라서 어산지에 대한 체포, 특히 영국 법원이 그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 것은 결국 위키리크스의 활동을 막으려는 의도 때문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벌써부터 어산지를 기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중이다(몇몇 공화당원들은 어산지를 암살하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어산지와 위키리크스는 다음번에 미국의 주요 은행에 관련된 문서를 폭로할 계획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위키리크스에 맞아 생긴 검은 멍이 거대 기업에게도 생기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위키리크스가 그렇게 할 권리를 계속 옹호한다.

김인식

심상정의 ‘연합정치’

투쟁은 “공허”하니 민주당과 연합하자?

진보신당 심상정 전 대표가 ‘문제적 발언’을 쏟아내며 ‘연합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심 전 대표는 11월 17일 민주당의 이른바 486 의원 모임인 ‘진보행동’ 출범식에 유일한 진보 정치인으로 참석해 “386세대”란 말 대신 “87세대”라는 표현을 쓰자며 공통점을 부각했다.

그는 11월 23일 부산 ‘진보광장’ 토론회에서 “나는 개혁세력에게 … ‘개혁세력이 진보 이슈를 먹어 버려라’고 얘기한다. 반면에 진보 세력에게는 ‘개혁세력의 힘을 먹어 버려라’고 얘기한다. 양쪽 다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좁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전 대표가 했다는 “성찰”은 이렇다. “용산, 비정규 집회 … 열심히 외치고, 농성하고 … 공허한 일이었다. 그들과 함께 비를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는 비를 함께 맞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발상에 따라 그는 “야당 간 비정규직 문제 해결 위한 상설협의체를 제안”했다.

명분

그래서 “개혁세력이 진보 이슈를 먹어 버려라” 하는 말은 민주당이 비정규직 같은 이슈에 관심을 보여 연합의 명분을 만

들어 달라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근로자파견법과 비정규직 약법 등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공격해 온 장본인인 민주당과 손잡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무망한 일이다. 그것은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우리 편의 원칙을 후퇴시키고, 투쟁을 가로막을 수 있다.

아래로부터 투쟁이 “공허”하다며, 민주당과 협력해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하자는 그는 국가기구의 위신과 권능을 인정하는 태도까지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3년 만에 상승(常勝)의 최정세 우리 군은 연전 연패의 당나라군

대가 되어 가고 있는 … 우러스런 현실”이라는 주장은 그의 이런 태도를 보여 준다.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 부원장 노항래는 “이제 진보·개혁 진영이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을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심 전 대표가 어떤 정치세력과 코드를 맞추고 있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성찰”을 통해 민주당의 “87세대”와 차이를 “좁혀 나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자신의 ‘연합정치’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이라는 심 전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그는 스스로 진보

의 가치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연합정치’는 진보적 대의와 강령에서 후퇴하는 선거공학적 정계 개편 시도에 가깝다.

심 전 대표가 “공허”하다고 폄하했지만, 용산 철거민들은 “열심히 외치고, 농성한” 덕분에 그나마 총리 사과와 생계보장을 받아냈다. 최근에는 기동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구호대로 “함께 비를 맞은” 사람들과 끈질기게 싸워서 승리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투쟁 속에서 자본가 야당과는 다른 진보적 대안을 건설하는 일이다.

김문성



11월 30일 이탈리아 학생시위 이탈리아 학생들은 교통전가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보여 준다.

사진 출처: Tiziano De Mattos

우파 정부를 뒤흔든 이탈리아 학생 반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취약한 이탈리아 정부는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 2주 동안 이탈리아 학생들이 정부의 교육 개혁안에 맞서 투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20개 이상의 도시에서 학생들은 도로를 막고 학교와 대학교를 점거했다.

밀라노, 베니스, 스칼레아 등의 학생들은 철로를 점거하고 매표소를 봉쇄해 기차 운행을 중단시켰다. 11월 30일 '모든 것을 막는 날'에 로마는 완전히 정지됐다.

이날 다섯 개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생들에 연대를 보내기 위해 학교 점거에 들어갔고, 이탈리아 곳곳에서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했다.

학생들은 소요 진압 경찰을 비꼬려고 대형 보드지를 [경찰] 방패처럼 들었다. 학생들은 로마의 콜로세움과 피사의 사탑을 점거했다.

일부 집계를 보면, 거의 학생 1백만 명이 이날 행동에 참가했다.

삭감

베를루스코니 개혁안은 내년 교육 예산을 3억 유로나 줄일 것이다.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에서 2천6백만 유로가 삭감될 것이다.

한때 베를루스코니의 동맹이었던 '전 파시스트' 지안프란코 피니가 각료 4명과 함께 집권당에서 이탈하면서 우익 연립정부 내 계파 싸움이 더 심각해졌다.

12월 14일 피니는 베를루스코니 불신임 투표를 발의했다. 베를루스코니가 과반 의석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민주당(옛 이탈리아공산당)과 다른 중도좌파들은 피니를 도와 베를루스코니를 사임시키려 한다. 만약 베를루스코니가 지지표를 잃는다면 그는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베를루스코니와의 관계가 틀어진 옛 파시스트와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파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 거리의 운동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작업장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학생 투쟁을 지지한다는 증거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철도역을 점거했을 때 노동자들은 학생들을 지지하는 배너를 들거나 학생들에게 커피를 가져다주었다.

로마에서 버스 운전사들은 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사장들이 버스 운전사들에게 압력을 넣었지만 버스 운전사들은 학

생들의 도로 봉쇄에 항의하지 않았다.

점거에 참가한 학생들은 노조총연맹 지역 활동가들과 접촉했다.

지난한 불황으로 이탈리아 실업률은 9퍼센트에 육박한다. 특히 청년이 큰 타격을 입어 18~25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30퍼센트에 달한다.

노동총동맹(CGL)의 한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고용계약을 맺는 25세 이하 청년의 80퍼센트가 임시직입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탈리아 노동자들은 실업에 항의하는 시위를 여러 차례 벌였다. 그러나 대규모 파업 계획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현재 이탈리아 상황은 영국과 비슷해 보인다. 즉, 학생들은 급진화하면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보여 주고 있다.

만약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거리 저항에 합류하고 파업을 벌인다면 그 파장은 베를루스코니 사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탈리아 좌파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시안 루딕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기자 번역 김용욱



그리스 반자본주의 좌파는 이주노동자와 다른 노동자를 이간질하려는 시도에 맞섰다.

사진 출처: Tiziano De Mattos

유럽 노동자 투쟁에서 배우기

긴축정책에 맞선 투쟁이 유럽을 뒤흔들고 있다.

긴축정책에 맞선 투쟁의 중심 세력은 노동자들이다. 그와 동시에,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과 청년실업, 민주적 권리 탄압에 환멸을 느끼는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도 투쟁의 주요 세력이다. 청년들의 투쟁은 노동자 투쟁의 방아쇠 구실을 하거나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되면서 전체 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이 투쟁은 한두 번의 집회나 파업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되는 양상이며, 다른 나라 노동자들을 고무하면서 꼬리를 물고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바야흐로, 2008년 세계경제 위기 후 노동계급에 그 대가를 뒤집어 씌우려는 정부들에 맞선 계급투쟁이 폭발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커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대규모 경기부양에도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가 번지고 있고, 최근 들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기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각국 정부는 세계경제 전망이 불투명할수록 노동자 공격에 집착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 고동전가에 맞선 이 투쟁이 더 강력해진다면 각국 정부와 기업주들의 공격을 좌절시키고, 고동전가가 아닌 새로운 대안을 쟁취할 수 있다.

좌파

투쟁의 전진을 위해서는 단결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내세워 운동의 결집점을 제시하고, 승리를 위한 올바른 정치적 방향을 내놓으려는 좌파의 구실이 중요하다.

지난봄 그리스 파업에서 그리스사회주의노동자당 등 급진좌파가 국민마다 운동의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 기여한 것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스사회주의노동자당은 정부의 파업 분쇄를 노린 온갖 정치적 공격에 일관되게 맞섰다.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보너스를 공격하고 상대적 고임금을 문제 삼으며 다른 부문 노동자들한테서 고립시키려 하자 이를 방어하며 단결을 호소했다. 정부가 인종차별적 공격으로 또다시 투쟁 대열을 분열시키려 했을 때도 그리스사회주의 노동자당 활동가들은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해서 투쟁 대열에 동참하면서 효과적으로 저항했다.

투쟁의 요구와 방향을 제시하려는 노력도 매우 중요했다. 그리스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빌미로 긴축을 강요하자, 정면 대결을 회피하려던 개혁주의 정치세력들과 달리 그리스사회주의 노동자당 활동가들은 정부가 부채상환을 중단하고 그 돈을 노동자의 삶을 지원하는 데 총당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경제 위기의 책임이 기업주들에게 있다는 점을 폭로하는 동시에 부자들 살리기 방식의 긴축에 반대한 투쟁의 정당성을 표현함으로써 운동의 결집점을 제시하려는 노력이었다. 쌍용차 파업 당시의 공기업화를 통한 고용보장 요구처럼 제대로 된 정치적 대안이 없다면 운동의 전진이 어려

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사회주의노동자당은 파업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리스 공산당 등이 투쟁을 그만 중단하고 국민투표를 요구하자는 주장을 내놨을 때에도 이에 맞서 중단 없이 투쟁을 지속하자고 선동했다. 아쉽게도 규모나 영향력이 충분히 크지 못해 전체 운동의 방향을 바꾸진 못했지만 말이다.

투쟁이 지속되고 규모가 확대돼서 판돈이 커질수록 좌파의 정치적 개입과 기여가 전체 투쟁의 향방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노조 지도부의 투쟁 회피적 방침이나 대중투쟁의 힘을 온전히 믿기보다는 제도정치 무대의 압력 요소쯤으로 여기는 개혁주의 정당들의 주도력에 도전하며 단결을 유지하고 투쟁을 발전시키려는 좌파정치세력의 구실이 중요해질 것이다.

양상

이런 투쟁은 단지 유럽 노동자들 애기만은 아닐 것이다. 국가마다 경제 위기 양상이 조금씩 다르듯이, 한국에서 지금 유럽과 비슷한 긴축정책이 추진되거나 프랑스나 그리스처럼 노동자들의 대규모 투쟁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

다. 그러나 지난 2년여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는 공격으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켜켜이 쌓이기는 긴축정책 정도가 덜 했던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패배는 경제 위기 고동전가에 따른 불만과 반감을 보여 준다(얼마 전 한나라당 의원 모임 '민본 21' 여론조사에서조차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61.6퍼센트나 됐다).

게다가 만약 앞으로 경기가 악화된다면 더한층의 노동자 공격과 이에 맞선 투쟁이 분출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유럽 노동자 투쟁은 정규직 대기업(대공장) 노동자들도 얼마든지 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줬다.

그동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보수성 때문에 더는 투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많은 활동가들이 낙담했다. 그러나 한국 정규직보다 더 나으면 나았지 나쁠 것 없는 노동조건에 좋은 복지 혜택을 누리는 유럽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그런 의구심을 일거에 날려 버렸다.

서유럽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좋아 안 싸운다는 주장(박노자)도 있었지만 바로 그 '좋은' 노동조건이 공격받을 때 오히려 대규모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줬다.

유럽 투쟁에서 보듯이 투쟁의 발전은 여러 부문의 투쟁이 쌓이는 과정에서 증대된다. 그 돌파구는 학생부문의 투쟁일 수도 특정 산업부문의 투쟁일 수도 있다.

지금의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이 승리한다면 이것은 의미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활동가들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집중해야 한다. 지난 20여년간 한국 노동운동이 보여 온 잠재력을 다시 발휘하고 전진할 때가 왔다.

정종남

마르크스 21

7호(2010년 가을)

가격 : 16,000원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는 계간 **마르크스 21**

심층 인터뷰 유럽 반자본주의 좌파 활동가 인터뷰 유럽의 재정 위기와 그리스 노동자 투쟁

특집 트로츠키 사망 70년 트로츠키는 살아 있다! - 전기 작가 로버트 서비스의 왜곡에서 트로츠키 구하기 국제사회주의 경향의 기원

논쟁 보험료 우선 인상론 비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어떻게 이를 것인가?

현대 진보사상 조류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인가?

쟁점 G20 - 세계 민중에게 고통 전가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반자본주의신당 NPA - 프랑스 급진 좌파의 새로운 지평

시리즈 기획 한국 경제 ③ 한국 진보진영의 경제 대안 논의

서평 《복지국가혁명》,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활해》,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론과 실천 (진화하는 결론) 결혼은 영원 불변이 아니다

문의 전화 02-2268-7608 marx21@marx21.or.kr http://www.marx21.or.kr

정기구독료

1년 64,000원	2년 120,000원	3년 180,000원
5년 300,000원	7년 420,000원	10년 600,000원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다함께가 발행한 신간 작은책

| 구입문의 : 02-2271-2395 http://www.alltogether.or.kr

[3대 권력 세습] 북한은 어떤 사회인가? - 북한 체제에 대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김하영 지음, 3,500원

우리는 왜 이주노동자를 환영해야 하는가 이정원 지음, 2,500원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2,500원

2009년 쌍용차 파업과 정치적 노동조합운동 박설 지음, 3,800원

Report@left21.com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2월 20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GM대우 비정규직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이 투쟁의 불씨를 퍼뜨리고 있다. 12월 1일 새벽에 GM대우 비정규직지회 황호인, 이준삼 두 조합원은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부평 대우자동차 정문 아치 꼭대기에 올랐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번 투쟁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싸울 것”이라며 결의를 높이고 있다. 황호인 조합원은 “정규직화가 이뤄질 때까지 내려가지 않겠다”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12월 7일 현재 1천1백35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GM대우 비정규직지회는 해고·외주화 등 사측의 악랄한 탄압과 부당징계에 맞서 왔다.

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이자 현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지부장인 이대우 동지는 당장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힘줘 말했다.

“얼마 전 GM대우 사측이 산업은행에 진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돈입니다.”

실제로 “GM대우는 지난 11월 월간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국내 완성차 업계 내수 판매에서 1년여 만에 르노삼성을 제치고 3위를 탈환했다.”(〈부평신문〉)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직을 전환배치하는 등 노동자들을 걸



노동자를 걸레 찢듯 쥐어 짼 GM대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해야 한다.

레 찢듯 쥐어 짼 성과인 것이다. 이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혹사하고 길거리로 내쫓은 GM대우 사측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다.

반갑게도 GM대우 정규직지부도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다 같은 노동자요, 동지라는 관점을 견지하여 우리

스스로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부메랑을 만들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정규직지부는 중식 집회에 간부들을 참가시키고 있고, 3~4개 현장조직에 속한 정규직 활동가들도 아침 홍보전과 중식·저녁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대우 부지부장은 “정규직 활동가들 사이에서 그동안 정규직의 연대가 부족했다는 각성이 존재합니다. 이번 투쟁은 원하청 공동투쟁을 다시 시작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지역의 진보정당들과 사회단체들도 연대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 지역단체 43곳으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와 종교계, 학계 등은 GM대우 비정규직 투쟁 지원을 위한 대책위를 결성했고, 12월 11일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불기 시작한 따뜻한 연대의 기운이 정규직·비정규직의 단결과 투쟁 승리로 이어져야 한다.

윤필언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재판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드러낸 사노련 재판

12월 3일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 활동가였던 오세철, 양효식, 양준석, 최영익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또, 남궁원, 정원현, 박준선, 오민규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쌍용차 파업 등 사회적 현안에 개입해 노사갈등을 심화시키고 불법파업을 선동하는 등 언제든지 불법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차별받고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연대한 것을 노골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사노련 사건은 2008년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이 또다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은 정권과 체제를 비판하며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사람들을



오세철 전 사노련 운영위원장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좌파도 국가보안법 탄압 대상이다.

끝까지 마녀사냥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마녀사냥은 최근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서도 시작되고 있다. 12월 1일 현대차 사측과 보수 언론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 노동전선, 다함께 등을 ‘불

순한 외부세력’으로 지목하며 공격을 시작했다.

사노련 탄압은 국가보안법이 언론·표현·사상의 자유 탄압법일 뿐 아니라 노동운동 탄압법이기도 함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한편, 검찰은 8명 모두 북한체제를 강

도 높게 비판해 왔음에도 “연평도 사태를 통한 교훈”이라며 국가보안법 적용을 당연시했다. 검찰은 “북한과의 연관성, 북한 주장에 동조만이 국가 변란 선전·선동 단체의 요건인 것은 아니다”며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좌파도 국가보안법 탄압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을 핑계로 내부의 정권·체제 반대자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도 열심히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하고 있는 이 활동가들은 법정에서 최후진술 등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폭로하고 사회주의의 대의와 정당성을 옹호했다. 또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을 지지하는 주장을 했다.

진보진영은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이 활동가들을 방어해야 한다.

최영준

동국대 시설관리노조



(가운데) 청소노동자(왼쪽)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청소노동자들이 등록금 동결만큼 많은 지지를 받다

12월 8일 동국대학교 청소 미화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연대 문화제가 열렸다. 노조 조합원 1백여 명과 새로 당선한 학생회와 학생 50여 명이 참가했다.

동국대 시설관리노조가 설립된 지 한 달 만에 대학당국은 몇 년 단위로 맺던 계약을 1년 만에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노동조합 탄압인 것이다.

조합원들은 눈이 심하게 몰아치고 바람이 출게 부는데도 쌓여 있던 불만을 구호와 외침으로 털어놓았다. 한 노동자는 관리자의 반말과 인격 모독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에 당선한 법대 부학생회장은 “등록금 동결 서명 운동에 8일 동안 5천 명을 받았는데 어머니, 아버지 등의 고용 승계 서명은 2일 동안 6천5백 명을 받았다”며 지지 발언을 했다.

성신여대와 고려대의 좋은 선례처럼 동국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고용 승계와 최저임금 등의 처우 개선이 꼭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더는 ‘유령’이 아닌 ‘인간’으로 사는 길이다.

학생들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연대할 것이다.

이성현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홍익대분회

더는 노예처럼 부려먹지 못할 것이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 75만 원과 월 식대 9천 원, 재계약을 빌미로 노예 부리듯 하는 관리자. 듣는 이를 기막히게 하는 부당 대우에 맞서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들은 12월 2일 민주노총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홍익대분회로 정식 출범했다.

대학 당국은 강의실조차 내주지 않고 교직원들을 동원해 출범식 준비를 방해했다. 지나가던 학생들마저 교직원에게 항의할 정도였다.

출범식에는 이웃 대학인 이화여대와 연세대 등의 분회장들이 와서 투쟁 경험을 나눴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다함께 서부, 서부비정규직센터 등 지역 사회단체들도 함께했다.

최병현

세종호텔노조



사진 제공 세종호텔노조

단결 투쟁이 승리를 낳았다.

통쾌한 승리를 거두다

세종호텔노조가 구조조정과 단체협약 후퇴를 시도하며 노조 탄압에 나선 사측에 맞서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우리는 세종호텔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임단협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계획하며 투쟁을 지속했고, 이에 놀란 사측은 찬반투표를 하루 앞두고 완전히 백기를 들었다.

우리는 이번에 실질임금 인상, 노조 전임자 확대, 후생복지 확대, 적정인원 총원 등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따냈다. 또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에 자극받아 ‘1년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의 정규

직 전환’ 요구도 내걸고 이를 관철시켰다.

사측은 임단협 기간 내내 전임 경영진과 체결한 고용안정 협약을 축소하고 향후 구조조정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질임금 인상과 적정인원 총원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도 외면했다. 지난해 회사의 적자를 고려해 임금을 동결하며 고통분담을 인내한 우리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더구나 사측은 타임오프를 빌미로 노조 전임자와 조합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등 노조를 약화시키려고 안달이었다. 또 ‘적정 인원 유지’ 조항 폐지와 비정규직 확대, 휴가 축소 등으로 수년간 투쟁해 쟁취한 민주노조의 성과물을 빼앗으려 했다.

노조는 사측의 공격에 단호히 맞섰다. 사측의 거짓말과 위선을 낱알이 폭로했고, 한 달 가까이 매일 아침·점심에 홍보전을 진행하며 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을 호소했다.

사측은 홍보전에 참가하는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고, 정의행위 찬반투표 장소까지 불허하며

법에 보장된 노조 활동을 탄압했다.

그러나 사측의 불이익 협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홍보전에 참가하는 조합원 수가 오히려 늘었다. 전체 조합원의 20퍼센트 이상이 홍보전에 참가할 만큼 투쟁의 열기는 뜨거웠다. 이런 힘 때문에 사측은 결국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승리의 쾌감을 느끼고 있는 조합원들은 “단결해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며 기뻐하고, “현장 투쟁은 계속된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위원장

고(故) 리영희 조사
(1929~2010년)

한국 현대사의 길잡이



12월 5일 리영희 선생이 별세했다. 강준만은 “리영희만큼 해방 이후 한국 현대사의 큰 사건들을 그 누구보다 더 직접적으로 광범위하고 치열하게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하고 말한 적이 있다.

정말 그랬다. 리영희는 “한국 현대사의 큰 사건들”, 곧 베트남전과 미군 개입, 미국 세계 전략, 분단, 남과 북, 군부 쿠데타, 자본과 시장 등에 관해 쉽없이 썼다.

그가 “글을 쓰는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오직 그것에서 시작되고 그것에서 그친다.”(《우상과 이성》, 한길사, 1977년)

중국의 사상가이자 소설가인 루쉰(루쉰; 리영희는 어느 글에서 중국식 발음인 루쉰보다 노신이 더 정감이 간다고 말한 바 있다)을 사랑한 리영희는 노신의 글쓰기를 이렇게 말했다.

“그[노신]의 글에는 현학적인 요소가 없다. 고매한 학설이나 이론으로 탁상공론하는 것은 동포에 대한 지식인의 배신행위로 생각했다.” 실은 리영희의 글쓰기 자세였다.

진실을 알리는 글쓰기는 리영희에게 건디기 쉽지 않은 개인사적 고통을 안겨 주기도 했다. 9번의 형사입건, 4번의 구속, 언론과 학계에서 모두 4번의 해직을 당했다.

그럼에도 리영희의 글은 수많은 사람들, 특히 대학생과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시인 고은은 《만인보》에서 “70년대 대학생에게는 리영희가 아버지였다”고 했다. 프랑스 신문 <르 몽드>는 리영희를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사상의 은사”라고 썼다.

김동춘은 《전환시대의 논리》(창작과비평사, 1974년)를 읽고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유신독재가 시작되면서 사회가 잔뜩 얼어붙고 서슬 푸르고 흥흥하던 1974년 초여름에 출간된 이 책은 대변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박정희 정권은 1979년에 이 책을 불온서적으로 지목해 판매를 금지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 책을 몰래 구입해 읽었다. 1천9백 원이던 것이 현 책방에서는 1만 원가량에 거래되기도 했다.

《우상과 이성》도 판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1986년 7월 초까지 7만 1천여 부가 판매됐다. 박정희 정권은 곧장 보복했다. 《우상과 이성》이 출간되자마자 리영희를 반공법으로 구속시켰다.

미국 제국주의의 본질을 밝히다

리영희는 미국 제국주의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미국은 제국주의다. 가장 악랄하고 가장 범죄적인 제국주의다.”

그는 일찍이 1960년대 중반에 미국의 베트남전을 비판했다. 당시 <조선일보> 국제부에서 근무한 리영희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비판적인 유일한 지면”을 만들었다.

리영희는 베트남전 종결 10년을 맞이해 그동안 써 왔던 글들을 모아 《베트남전쟁: 30년 베트남전쟁의 전개와 종결》(두레)을 1985년에 출간했다.

리영희는 주한미군의 진정한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선구적으로 밝혀냈다. 리영희는 미국 지배자들이 한 주장, 예를 들어 미 국방부 부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가 미 의회에서 한 증언을 인용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를 들춰냈다.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보호하기 위한 우산이 아니다. ... 미국이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다.”

2000년대 초반에 반전 운동에 참가했던 청년들 중에는 미국 제국주의를 향해 포효하는 리영희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 중인 몸을 이끌고 반전 집회에 참여해 미국의 이라크 전쟁과 노무현 정부의 파병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바그다드가 함락된 직후 열린 4월 12일 ‘국제반전평화 공동행동’의 날에 참여해서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은 미군의 바그다드 함락으로 개전 3주 만에 성공을 거둔 듯 보였지만 이후 더 큰 재앙들을 예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됐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최종 패배했다.

리영희는 독재정권이 금기시한 영역 중 하나인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진실을 알리는 작업을 했다.

특히 리영희가 1988년에 발표한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 연구》는 “정부(당국)가 오랫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 달리 남북한의 군사력 및 종합적 전쟁능력 비교에 있어서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최초의 연구다.”

그러나 리영희는 북한 체제에 비판적이었다. “북한 사회는 오랫동안 1인 숭배, 1당 독재, 폐쇄적 사회통제, 개인적 사유의 억제 등 어느 모로나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체제와 제도임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리영희의 북한 비판은 결코 남한 체제의 우월성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남한과 북한은 둘 다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리고 그 추악함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는 “통일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 사회민주주의 체제로의 수렴을 생각”했다.

그런 리영희도 1990년대 초반 옛 소련 블록의 몰락을 보면서 고민과 갈등을 했고 긴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 시기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었던 마르크스주의의 진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지식인의 고민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 시대의 요청에 응했다. 잠시나마 김영삼 정권에 기대를 걸었던 리영희는 김영삼 정권의 대북정책에 환멸을 느끼면서 혹독한 비판을 퍼부었다(《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두레, 1994년).

1999년 6월 15일 서해교전이 일어나자 리영희는 북방한계선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밝히는 <북방한계선>은 합법적 군사분계선인가?: 진실을 알고 주장을 하자>는 논문을 발표했다(이 논문은 《반세기의 신화: 휴전선 남·북에는 천사도 악마도 없다》, 삼인, 1999년에 수록돼 있다). 김대중 정부의 경찰은 이 주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했다.

리영희는 2000년 11월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긴 투병 생활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리영희는 마지막까지 낙관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한 단계, 한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이 50년 이란 조감도를 놓고 보면 역시 우리 민족은 진화하고 있었고, 인권과 의식도 전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김인식

마르크스주의 창시자 엥겔스의 삶과 투쟁

서평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관한 트리스트럼 헌트의 전기 나쁘지 않다. 이 책은 널리 읽히고 논의될 것이다. 헌트가 지적하듯이, 엥겔스의 자본주의 비판은 오늘날 경제 위기에서도 유효하다.

헌트는 영국 맨체스터의 노동계급 상태에 관한 엥겔스의 초기 저작부터 철학과 여성 차별에 관한 후기 저작까지 엥겔스의 주요한 지적 성과물들을 진지하게 검토한다.

헌트는 엥겔스와 그의 오랜 지적 동료인 칼 마르크스 사이의 관계를 자세히 서술하고, 엥겔스의 저작을 당시 지적 맥락 속에서 파악한다. 헌트는 이 위대한 교사도 선

배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음을 보여 주는데, 예컨대 국가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광원이자 공장 노동자였던 제임스 리치의 이론에서 영향받은 것이었다.

말년의 엥겔스는 당시 유럽에서 성장



《엥겔스 평전 — 프록코트를 입은 공산주의자》

트리스트럼 헌트, 글항아리, 3만 2천 원, 6백80쪽

하고 있던 사회주의 운동과 칼 카우츠키, 윌리엄 모리스, 케어 하디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아쉽게도 헌트는 1848년 혁명과 1871년 파리 코뮌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다룬다.

물론, 엥겔스는 성인이 아니었다. 헌트는 엥겔스의 화려한 성 생활, 폭음, 여우 사냥 애호, 동성애에 대한 반감, 교활한 정치 책략 등을 다룬다. 게다가, 엥겔스는 맨체스터에서 가족 소유 공장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벌었다.

헌트는 이 소득이 엥겔스와 마르크스가 분석한 잉여가치에서 나왔다고 지적한다.

그는 엥겔스가 위선적이었다고 비웃고 싶은 듯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사회주의자라면 모순 속에 살 수밖에 없다. (훌륭한 와인 창고를 채우는 것을 제외하면) 엥겔스는 대부분의 소득을 좋은 일, 특히 마르크스 가족들에게 썼다.

헌트는 엥겔스에게 전반적으로 우호적이다. 그는 엥겔스를 “매력적인 모순과 무한한 희생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한다.

이 책의 결론에서 헌트는 엥겔스가 스탈린주의 선구자였다는 [흔한] 미신을 사실상 해체한다. 헌트는 결론에서 오늘날 중국 노동자들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1840년대 맨체스터와의 공통점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그는 엥겔스가 오늘 살았다면 ‘공산주의’ 사상들이 아니라 중국 노동자들의 편에 섰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마지막 장은 레닌을 엘리트주의적 전위주의자로 그리는 무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여러모로 이 책은 프랜시스 윈이 쓴 《마르크스 평전》(푸른 숲)의 자매편이라 할 만하다. 박식하면서도 생동감있는 문체로 씌여 있다.

헌트의 엥겔스 전기는 읽어 볼 만한 책이다. 이 책이 엥겔스의 글을 읽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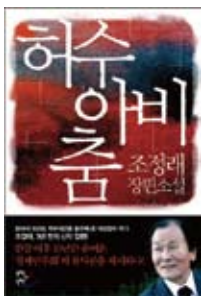
부패한 기업 권력을 고발하다

이 소설은 부패하고 정의가 실종된 자본주의에 대한 고발장이다.

조정래는 지난 40년 동안 들어온 ‘지금’은 축적의 시기이지 분배의 시기가 아니라는 말에 신물이 났다고 한다. 그래서 과연 소설 맞나 싶을 정도로 곳곳에서 정치적 입장과 집필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다. 저자의 목적은 궁극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이고, 당장에는 대중이 이 문제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사회의 썩은 물줄기의 원류를 대기업 집무실에서 찾는다. 동시에 대기업 사이의 경쟁이 부패를 전 사회적으로 고무하게 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이야기는 재계 2위 기업이 1위 기업의 뇌물기술자를 영입하는 장면에서 시작



《허수아비춤》

조정래 문학의 문학, 1만 2천 원, 4백40쪽

한다. 1위 기업 총수와 같은 죄를 지었는데 자신만 실형을 받은 것에 분개한 2위 기업 총수의 ‘신기술’ 투자다. 체계적인 비자금 조성 기법과 뇌물로 권력의 그물을 짜는 원천 기술들이 전이된다.

저자는 새로 온 뇌물기술자가 포함된 그룹 간부들 사이의 대화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끌어 나간다. 회장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이 직속 부하들 사이에서는 돈의 흐름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모든 인격이 돈에 종속된다.

또한 저자는 그룹 총수의 입을 빌려 자본의 파괴적인 논리를 말한다. 범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사라진다. 뇌물은 이윤 추구의 합리적 도구가 되고 노동자들은 살아 있는 인간이 아니라 재료로 취급된다. 노조는 없어져야 할 혐오스런 존재다.

회장이 부하들 위에 군림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장면, 부하 직원이 자신의 총직함을 인정받으려 벌이는 자해 소동은 마치 조폭 영화를 보는 것 같다. 자연스레 삼성 이견회와 현대 정몽구가 겹쳐 보인다.

조정래는 이 책의 제목에 두 가지 의미

를 부여한다.

하나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벌이는 기업들을 허수아비 같은 상태로 무력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른 하나는 대중이 이미 자본주의의 탐욕성을 내면화해 “자발적 복종”과 “집단 최면 상태”에서 허수아비처럼 춤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자본주의 체제가 가하는 일상적 압력은 실질적인 것이다. 그것은 소외된 개인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자본주의의 비판자조차도 무관심과 체념에 감염시킬 수 있다.

이 압력에 굴복해서 안 된다는 노(老)작가의 용기 있는 주장은 호소력이 있다.

저자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시민단체 양성을 통한 기업감시와 불매운동 같은 개인들의 윤리적 소비 행위를 통한 착한 기업 만들기를 제시한다.

공감 가는 측면이 많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소비자 운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공상적이다.

소설에 묘사된 것처럼 자본주의에서 “모든 권력은 돈에서” 나오지만 그 돈, 곧 이윤은 노동자들의 노동에서 나온다. 따라서 이윤이 발생하는 생산영역에 집단적이고 단결돼 있는 강력한 저항이 존재한다면 기업의 권력도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저자의 대안이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도전적인 작가 정신이 상신하게 살아 있는 작품이다.

한수영

또다시 ‘말잔치’로 끝난 유엔기후회의

장호중

지금 멕시코 칸쿤에서 하고 있는 16차 유엔기후회의는 참담한 실패로 막을 내릴 것이다.

지난해 오바마 정부가 주도해 만든 코펜하겐 ‘합의’는 세계 지배자들의 말잔치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여 줬다. 몇 줄 안되는 문구를 요약하면 이렇다.

‘지구 기온 상승 폭을 2도 이내로 막자. 누가 언제 어떻게? 글썄’

1백여 국가에서 온 지배자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실컷 떠들어놓고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목표도 분명하지 않은 이 문구들에조차 합의하지 않았다.

최근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정보를 보면 미국은 자신이 주도한 코펜하겐 합의를 따르는 국가들에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고 그러지 않는 국가들에는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했다.

실제로 오바마 정부는 에콰도르와 볼리비아가 코펜하겐 합의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약속한 지원금 2백50만 달러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 반대로 수물 위기에 놓인 볼리브에는 5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진심 어린’ 지지를 끌어내기도 했다.

엄청난 비판 속에서 시작된 칸쿤 회의에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에서 — 대안으로 여겨진 것은 2012년에 종료되는 교토 협약을 연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공의 적’ 미국 대신 일본 정부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회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교토 협약 연장은 절대로 안 된다고 못 박았다.

4대강 사업을 ‘녹색’ 성장 정책이라고 포장한 이명박 정부가 유력한 18차 유엔기후회의의 주최자로 거론될 정도니 유엔기후회의의 수준을 알 만하다.

그런데도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유엔기후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하자며 칸쿤 회담장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홍보 행사에 참석해 추임새를 넣었다. 그가 여전히 운동의 일부라고 느끼는 한국의 환경운동가들에게 이는 무척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사진 출처 redroadcancun

12월 5일 유엔기후회의가 열린 멕시코 칸쿤 시내에서 회담장을 향해 행진하는 시위대

어떤 종류의 기후정의 운동이 필요한가

안타깝게도 유엔 회의의 암울한 전망은 전 세계적 기후정의 운동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듯하다. 기후정의 운동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들에 기대할 게 없고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는 각성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이 운동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놓고는 뚜렷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이런 전망 부재 때문에 운동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코차밤바 회의 당시에도 본지가 지적한 약점이었다(레포트21) 31호에 실린 관련 기사를 보시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제3세계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기후변화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체제’ 전환을 이루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온실 가스를 대폭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선진국에 사는 소비자들의 개인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물론 개인적 에너지 절약 운동만으로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선택을 바꾸는 것만이 현 사회의 생산방식을 바꿀 근본적 대안이라는 생각이 상식처럼 퍼져 있다.

이런 생각은 거꾸로 된 것이다. 평범한 노동자·가정주부·학생 들은 자신이 어떤 에너지를 소비할지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아파트나 연립 주택을 지을 때 단열재를 얼마나 쓸지, 난방 시스템을 어떤 것으로 할지, 대중교통 수단을 얼마나 보급할지, 화력발전소를 지을지 풍력발전 단지를 지을지 등 이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는 모두 건설회사·발전회사·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개인들의 소비 행태가 생산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방식이 소비 패턴을 결정한다.

정부가 나서서 재생에너지 보급에 투자하고, 건설회사들이 더 안전하고 따뜻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을 짓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승용차 생산을 규제하면서 대신 대중교통 수단을 보급한다면 대중의 소비 패턴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생산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려면 노동자들의 회생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많다.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지 않는 한 기후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현 사회에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곳은 수도 없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도로 중심의 교통 체계다.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나 고용 조건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지난 12월 1일 열린 ‘칸쿤 기후회의’ 이후의 기후운동 전략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의로운 전환’ — 노동자 회생 없는 에너지 전환 — 이라는 기후정의 운동의 전략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도 총고용량은 순증가할 수 있다는 가정이 현실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문에는 쉽게 답할 수 있다. 노동자들이 잘 싸우면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의문은 현대 사회의 (에너지) 생산량 자체가 환경 문제를 낳는다는 생태주의자들의 주장을 수용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에너지 생산 증가가 필연적으로 엄청난 환경 파괴를 낳을 것이다.

그러나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류의 에너지 소비에 절대적 한계가 있다는 근본 생태주의자들의 주장에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 지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압도적으로 태양에서 온다.

문제는 생산량 자체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있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소비의 한계는 자연의 본질이 아니라 이 체제의 성격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지는 대부분 개별 자본가들이 정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 혹은 인간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연의 미래를 고려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 논리가 자본가들의 생존을 지배하기 때문에 위기의 징후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치킨 게임을 멈출 수가 없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의 바람을 이렇게 묘사했다. “내가 지나간 뒤에 홍수가 덮치길!”

이처럼 합리적 계획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신 나간 경쟁이, 민주적 통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본의 독재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고유한 특징이다.

반대로 우리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에너지 체제를 전환한다면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전 세계를 어둠과 추위 속으로 밀어넣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

따라서 기후정의 운동은 시장 경쟁과 자본의 독재에 맞서는 반자본주의 운동이 돼야 한다.

입학사정관제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특별 통로

이명박 정부는 입학사정관제를 중요한 대입 정책으로 강조해 왔다. 정부는 “단순 교과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입학사정관제가 학생의 창의성, 잠재력을 평가한다고 홍보했다. 점수 경쟁을 벗어나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줄일 것이라고 선전했다.

경쟁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일부도 입학사정관제가 수능 위주의 지독한 입시경쟁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할수록 문제점이 더 크게 드러나고 있다.

경쟁은 오히려 확대됐다. 수능, 내신 성적은 기본이고, 학생들은 각종 자필서류와 추천서, 논술, 면접, 학생부 비 교과 영역 등도 준비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학생들을 고통에 내몰았던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입학사정관제 펜타곤’으

로 진화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교육도 늘어났다. 스펙을 관리해 주는 컨설팅이나 추천서 대필이나 면접 등 새로운 형태로 1년에 6백만 원, ‘하루 두 시간에 40만 원’ 등 노동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고가 사교육이 폭증했다.

스펙

무엇보다 부모의 생활 수준이 입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얼마 전 한 토론회에서 한 고3 담임교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봉사활동을 해 기른 국제적인 감각과 수상 실적 등을 인정받아 리더십 전형에 합격한 사례를 술하게 봐 왔다”고 말했다. “심지어 고3 여름방학 때 프랑스 총리를 만나 찍은 사진”이 스펙이 되기도 했다.

부유층 자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목고와 해외 고등학교 학생을 우대하

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고려대 과학영재 전형은 특목고생 비율이 95.1퍼센트, 이화여대 글로벌 전형은 특목고생 비율이 73.4퍼센트에 이른다. 2010 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특목고와 해외 고등학교 출신이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는 부유층을 위한 ‘특별 통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나라당 의원마저 “입학사정관제, 외교부 공무원 특채 같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다.

물론 입학사정관제 전형 중에는 농어촌 특별 전형이나 저소득층 전형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전부터 있었던 전형을 입학사정관제로 통합해 놓은 것일 뿐 입학사정관제 때문에 확대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입학사정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미국을 보면 문

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미국] 입학사정관제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현명한’ 제도라기보다는 연줄이 확실한 상류층 자녀를 위한 ‘VIP 초대장’과 같다.”(대니얼 골든,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

귀족이 지위를 세습하듯 부유한 동문 자녀에게는 입학 특혜를 준다. 미국 전 대통령 조지 부시의 딸 바바라가 예일대에 입학해 부시 가문이 4대째 예일대 동문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서 보듯 말이다. 미국 주요 대학 동문 자녀 비율은 전체 학생의 10~15퍼센트에 이른다.

미국 상위 1퍼센트가 간다는 아이비리그에 기여입학제로 입학하는 학생이 13퍼센트나 된다. 대니얼 골든은 아이비리그에서 어떤 특혜도 없는 인재들은 겨우 “정원의 40퍼센트를 놓고 경쟁한다”고 말한다.

대학들은 부유한 동문 계층이 형성돼 기부금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때문에 서슴없이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자리를 부유한 학생들에게 내어 준다.

한국도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면 미국처럼 거래와 특혜가 스며들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대학이 학생선발에 자율권을 갖게 되면, 대학들은 기여입학제와 연고자 특혜를 도입하고 고교 등급제를 시행하려 할 것이다.

불공정하고 학생들의 부담만 늘리는 입학사정관제는 폐지해야 한다.

진정으로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살리는 교육을 하려면 입시 경쟁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대학을 평준화해 대학 서열을 없애고, 등수를 매겨서가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대학 입학 자격을 줘야 한다.

정선영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

〈레프트21〉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 www.left21.com
후원하기 계좌번호 (명의: 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웹사이트(www.left21.com)를 방문하시면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레프트21

영국 학생 운동

학생들의 삭감 반대 투쟁이 정부를 강타하다

[편집자 주] 영국 의회가 12월 9일에 1년 등록금을 최대 9천 파운드(약 1천6백만 원)까지 인상하는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날은 결정적인 저항의 날이 될 것이다. 학생운동의 규모와 전투성은 이미 지난 석 주 동안 증대해 왔다. 노동자와 학생들이 단결한다면 이 운동은 보수당-자유민주당의 삭감 동맹 정부를 심각한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시안 루딕**이 12월 1일 정부의 교육 삭감에 항의해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에 나선 학생들의 투쟁을 취재했다.

지난주 수요일[12월 1일] 중고등학교·칼리지·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 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학생 시위였다.

특히 중고등학교나 직업 교육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규모로 참가한 것이 이례적이었다.

이 시위들은 교육보조수당 — 16~19세의 빈곤층 출신 60만 명이 현재 이 혜택을 받고 있다 — 을 폐지하고 1년 등록금을 최대 9천 파운드까지 대폭 인상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대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드러내는 분노의 정도나 시위 규모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을 보여 준다.

11월 10일 런던에서 있었던 보수당사점거 사건 후 경찰·언론·정부는 학생들을 협박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지배 엘리트의 공격과 배신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었다.

재밀 키팅은 맨체스터에 있는 제비리언 가톨릭 식품 칼리지(식품 칼리지는 대입 준비반이다) 학생이다. 그는 4백 명이 참가한 동맹 휴업을 주도했다. 그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부자들은 요리조리 부담을 피해가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싸우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사회주의자가 되면서 필수로 많은 사람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기려면 학생과 노동자 등이 연대해야 해요. 학생들이 정부에게 힘을 보여 줄 때입니다.”

경험

엘리서는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 직업 교육 학교에 다닌다. 그녀는 대입 준비 과정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에 참가했다. 그녀는 “시험을 치르고 학교를 졸업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었다. “일자리가 없어요. 특히 나처럼 경험 없는 젊은 애는 어렵도 없다고요. 내 언니는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어요. 학교 성적도 정말 좋은데 말이에요. 엄마한테 손 벌리지 않고 일해서 살고 싶다고요.”

페품 취급을 당하는 이 세대의 정서를 시위들에서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베리 칼리지의 사미르 힌크스는 이 정서를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자유민주당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11월 10일 첫 시위



사진 제공: Merv Scott

12월 9일 대규모 학생시위 “페품” 취급 당하던 학생들이 투쟁에 나서면서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 있다.

의 불꽃이 지금 뿔뿔 타오르는 불길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체제가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돼 있어요. 부자들이 쉽사리 얻는 것을 우리는 필사적으로 싸워야 얻을 수 있어요.

“교육 예산 삭감이 다가 아닙니다. 미래가 없는 청년 노동계급과 관련된 문제기도 합니다.

“자본주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짓입니다. 자본주의는 극빈층에게서조차 이윤을 뽑아내고 지구를 파괴합니다. 나는 삭감 저지만이 아니라 이 체제를 분쇄하고 싶어 사회주의자가 됐습니다.”

많은 중고등학교의 동맹 휴업은 페이스북과 말로 조직됐다.

아니는 1천1백 명이 동맹 휴업한 치스윅 커뮤니티 스쿨(런던 서부)의 학생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소수만 모일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수백 명이 되고 결국 1천 명이 모였다.”

다른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효과적인 저항 방식을 토론하며 집단적으로 조직했다.

재밀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한 주 전부터 동맹 휴업을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페이스북 그룹을 만들고 리플릿을 제작하고 포스터를 붙였죠.

“사람들은 교육보조수당이 없어지면 수업을 못 듣게 된다면 걱정했죠. 등록금 때문에 나중에 수천 파운드의 빚더미에 앉게 될 거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본머스에서 있는 아트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다니는 조지 대릴은 학생들이 동맹 휴업으로 얻게 된 자신감을 이렇게 묘사했다.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집결 장소에 갔더니 이미 인근 지역 학생들이 와 있었어요.

“우리는 반대편 입구로 들어왔어요.

두 대열이 서로 알아보고는 바로 합류했어요. 서로 끌어안고 환호성을 지르다 이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자신감이 생기던지.”

학생들이 동맹 휴업을 주저하거나 교사들에게 제지당한 일부 학교들에서도 분노와 자신감이 폭발했다.

폴튼고등학교 11학년 쇼나는 “우리 학교는 농성을 허용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고 말했다. “쉬는 시간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어렵도 없다고 생각해 우리는 동맹 휴업을 조직했어요.”

강경하게

일부 지역들에서는 경찰이 강경하게 나왔지만 시위대를 막지는 못했다.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각오를 다지게 했다. 조지는 “우리가 본머스 시청으로 가려고 하자 경찰이 장벽을 세워 우리를 막았어요” 하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학생들은 장벽을 밀어내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우리가 도로를 봉쇄하고 있는 모습을 남들이 보기를 바랐어요. 사람들은 ‘시내로, 시내로’ 하고 외쳤어요. 가는 도중에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 농성을 했어요. 6백 명이나 됐어요. 정말이지 하나가 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니는 경찰이 런던에서 벌어진 충돌을 학생들 탓으로 돌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리가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봉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 있었거든요.”

저항은 삭감과 체제의 불의에 대항하는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심대한 물음을 제기했다. 전에는 정치 활동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승리의 비결에 관해 가장 급진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조슈아는 리즈에 있는 내크로 트레이닝 센터에 다닌다. 그는 보수당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내가 다니는 칼리지에 와서 우리 생활이 어떤지 보라구. 그러면 이해할 수 있으려나.

“정부를 보고 있으면 투표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지를 구하려고 거짓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투표해서 뭐해요?”

재밀은 이렇게 말했다. “시위 다음 날 칼리지에 갔을 때 모두들 동맹 휴업과 그 다음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내게 ‘시위는 파업처럼 해야 해. 하루로는 못 이겨. 더 많이 시위를 해야 해’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삭감 반대 투쟁을 조직할 거예요. 우리는 조직돼 있어야 하고 정부의 의도와 그것을 저지할 방법을 알아야 해요.”

또, 몇몇 학생들은 노동자와 공격받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했다.

사미르는 이렇게 말했다. “동맹 휴업 덕분에 삭감 문제 전체가 주목을 받았어요. 우리가 시청으로 갔을 때, 그곳 공무원 노동자들도 크리스마스 동안 사흘치 급여를 받지 못할 예정이었어요. 이분들은 정말 도움이 됐고 학생과 노동자의 연대를 굳건하게 하는 데 기여했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동, 저항, 동맹 휴업이 투쟁 방법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슈아는 “다음번에 더 많이 모이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모자라지만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번역 천형석

레프트21을

정기구독하십시오

여러분의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기업 광고 전혀
없이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레프트21에서 접한 진실을 널리 전하고 싶다면, 한 부를 더 구입해 주위에 소개해 주세요.
자본과 권력에 맞선 저항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길입니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1년(26개 호) 5만 원 | 2년(52개 호) 10만 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하나은행 296-910007-15804 국민은행 020601-04-080896 우리은행 1005-301-422382
신한은행 140-008-401399 농협 301-0010-1643-71

구독 기간 중에 구독료나 우편료가 올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